



주간통일정세 2009-18(2009.04.27~05.03)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9-18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꽃파는 처녀’ 공연관람(5/3,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노동절) 행사에 참가한 금속공업부문과 연관부문 기업소의 노동자들과 함께 가극 ‘꽃파는 처녀’ 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
- 김 위원장은 피바다가극단 예술인들이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원작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형상”한 데 대해 큰 만족을 표시하면서 그들의 공연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중앙통신은 전언
- 공연 관람에는 김영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겸 인민무력부장, 최태복 김중린 김기남 당중앙위원회 비서,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강능수 문화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당 중앙위 책임간부들, 김명국 현철해 리명수 김원홍 인민군 대장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성원들”이 동행

● 김정일, 5.1절 경축공연 관람(5/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1절(노동절)을 맞아 1일 금속공업부문과 연관부문 기업소의 노동자들과 함께 국가공훈합창단의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공연에는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리영호 북한군 총참모장,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최태복·김중린·김기남,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당 중앙위 부장 및 1부부장들을 비롯한 책임간부들, 군 대장 김명국·현철해·리명수·김원홍을 비롯한 군대의 지휘부가 자리를 함께했음.

● 김정일, 함남 중학교 시찰(4/2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경남도 낙원군에 새로 지어진 서중중학교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
- 그는 이 학교에서 컴퓨터실습실을 둘러본 후 “모든 사람들이 높은 컴퓨터 기술을 소유하게 하자면 초등, 중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컴퓨터 교육을 주요 기초과목의 하나로 여기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 이 학교는 김 위원장이 바닷가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군인들을 동원해 짓고 “컴퓨터를 비롯한 수많은 교육기재들을 보내준 은정어린 사랑의 선물학교”라고 통신은 소개
- 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번 현지지도 수행인물은 밝히지 않음.



- **김정일, 원산시 여러 부문 현지도(4/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산시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김 위원장은 해안광장에 세워진 김일성 동상과 강원도 김일성혁명사적관을 참관한 뒤 원산 시내를 돌아보면서 도시경영사업과 송도원야외극장을 현지도했으며, 원산시가 도시전망계획에 따라 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도시경영사업을 개선해 거리들을 변모시킨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보도
 - 현지도에는 노동당 강원도위원회 리철봉 책임비서와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장성택 당 행정부장, 최익규 당 선전선동부장, 당 중앙위 1부부장들인 리제강 리재일이 수행
 - 앞서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원산농업대학을 방문해 새로 건설된 토양식 무공해 온실을 현지도했다고 27일 오전 보도, 원산 농대 현지도에는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와 장성택 당 행정부장, 박남기 당 중앙위 부장 등이 수행

- **김정일, 사색하라…나도 집중하면 정신 가물(5/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자 ‘숭고한 현신의 세계’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위원장의 “위대성”을 선전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간부에게 한 이 같은 발언을 인용,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간부들에게 일하는데 있어서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자신도 “일감을 놓고 몇시간씩 정신을 집중하여 사색하느라 정신이 가물거릴 때도 있다”고 언급

- **北 후계체제 권력투쟁 격화(5/4, 지지통신)**
 -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후계를 둘러싸고 체제 내부에서 권력투쟁이 격화되고 있다는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동북아시아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4일 보도
 - 통신은 ‘포스트 김정일’에 김 위원장의 장남 정남씨를 지지하는 실력자 장성택(60) 국방위원과 차남 정철, 삼남 정운씨를 후원하고 있는 군 고참 간부가 대립, 양 파벌 간 싸움이 최근의 로켓 발사 등 북한의 강경자세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
 - 장성택과 대립하고 있는 군 간부는 조선인민군의 현철해(75), 리명수(72) 대장 등 2명임.
 - 이들은 김 위원장의 지시를 군에 전달하고 군의 반응을 보고하는 입장으로, 북한 내에서의 영향력도 강력한 것으로 보임.
 - 양 파벌 간 불화는 표면화되지 않고 있지만 동북아시아의 외교 소식통은 “후계 문제가 금기시되던 상황에서 현 대장이 정철씨나 정운씨를 새로운 장군으로 임명하려 했다”며 “이것이 장성택과의 대립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



나. 정치 관련

● 노동신문, 美 핵우산에 핵억제력 강화(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자위적 핵억제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강점 미군사령관 윌터 샤프가 또 다시 우리 공화국을 심히 자극하는 호전적인 망발을 늘어 놓았다”며 전작권 전환 후 핵우산 유지, 검증가능한 핵폐기, 북한의 6자회담 복귀 등의 언급을 지적
- 노동신문은 “북침전쟁계획의 완성과 남조선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떠들면서 우리더러 핵을 폐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장을 놓고 손들고 나앉으라는 소리와 같다”며 “자위적 군사력이 없으면 자주권 수호는 물론 나라와 민족의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주장

● 北단체, 연일 실천연대 석방 촉구(5/5,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 대변인)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측본부는 5일 실행을 선고받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핵심간부들을 석방하라고 남측에 촉구, 이 단체 대변인은 5일 발표한 담화에서 “실천연대는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북남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서 왔다”며 “실천연대에 대한 괴뢰당국의 탄압책동을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바라는 전체 조선민족의 이름으로 단호히 규탄배격한다”고 주장

● 北직총, 南노동자 반정부 투쟁 촉구(5/4, 직총 중앙위 대변인)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중앙위원회는 4일 남한 정부가 5.1절 행사를 탄압했다고 주장하면서 남한 노동자들에게 반정부 투쟁을 촉구, 직총 중앙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명박 정부가 “5.1절에 즈음해 진행된 ‘5.1절 범국민대회와 용산지역 철거민들을 추모하는 100일 추모집회를 불법으로 몰아대며 수많은 경찰병력을 동원해 수백 명의 참가자들을 체포·연행하는 만행을 감행했다”고 비난
- 대변인은 “남조선의 전체 노동자들은 자기의 계급적 사명과 본분을 깊이 자각하고 각 계층 인민들과 굳게 단결해 사회의 민주화와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

● 北, 오바마, 부시와 조금도 다를 것 없어(5/4,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최근 미국이 ‘대북 무시 및 압박’ 전술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현 (오바마) 행정부는 이전 (부시) 행정부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고 4일 밝힘.
- 외무성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강권으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시키고, 구속력도 없는 의장 성명을 조작해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재



를 실제 행동에 옮긴 불법 무도한 그 행위는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소개

- **조평통, 작계5029 맞서 핵 억제력 강화(5/3, 조평통 대변인 담화)**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일 북한의 급변사태 대비와 관련한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적대행위이고 전면적인 군사적 대결선포”라며 이에 대응해 “자위적 핵 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 조평통은 대변인 담화에서 샤프 사령관이 4월 22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연설에서 “북한의 우발상황(급변사태)에 대비한 계획(plan)을 준비 중”이고 “한·미는 작계 5027과 5029를 통해 즉응전투태세를 유지하게 될 것”(파워포인트 자료)이라고 말했으며, 우리 군 당국자들도 이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맞장구를 쳤다”면서 이같이 주장

- **北, PSI참여 전쟁 유발 경고(5/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2일 이명박 대통령이 4월 21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구상(PSI)에 가입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며 남측 정부가 PSI에 전면 참여하는 ‘잘못된 선택’을 하면 “이 땅에서 전쟁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
 - 신문은 “언제 어디서 어떤 충돌이 일어날 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현 북남관계이고 조선반도의 정세”라며 “이런 속에서 남조선이 PSI에 전면 참가하려 하는 것은 화약터미 위에서 불장난을 하려고 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행위이고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난
 - 신문은 이어 “공화국은 이미 남조선당국이 PSI에 전면 참가한다면 그것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그에 대처해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데 대해 명백히 천명했다”면서 “그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라고 강조

- **北외무상, 6자회담 불참입장 확고부동(5/2, 조선중앙통신)**
 - 박의춘 외무상은 4월 29일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 위원회 각료급회의 연설에서 “6자회담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히고 “강력한 전쟁억제력”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 박 외무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거론, 이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법위에 군림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발전”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해 나선 이상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



- **北, 유씨 조사 계속 심화중(5/1,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 북한의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일 남한이 현대아산 개성사업소 직원 유모씨에 대한 북한 억류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과 보수세력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경우 사태는 더욱 엄중해지며 개성공업지구 사업에도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북측 총국 대변인은 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이 말하고 유씨가 “개성공업지구에 들어와 우리의 존엄높은 체제를 악의에 차서 혈뜰으면서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해당 법에 저촉되는 엄중한 행위를 감행하였다”며 “해당 기관에서는 현재 조사를 계속 심화하고 있다”고 언급
 - 북한의 개성공업지구 출입사업부는 지난 3월30일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선 유씨에 대한 혐의를 자신들의 “정치체제를 비난하고 여성 종업원을 변질·타락시켜 탈북을 책동”한 것이라고 주장

- **北, 南 반복대결 국제화 시도 비난(5/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일 ‘동족 모해와 대결에 환장한 역적배들의 추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의 제재와 관련, 자신들의 “격분을 더욱 더 자아내는 것”은 “이러한 적대세력들의 소동”을 남한이 “앞장에서 부채질하며” 대북 “대결 책동을 국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
 - 매체는 4월 하순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의 개폐회식에 ‘게스트 국가’로 신동의 외교통상부 국제기구정책관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중상모독하기 위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보려고 어리석게 소란을 피웠다”고 비난

- **北, 비동맹회의 6자회담 불참 北 지지 주장(5/1,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월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 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에 “6자회담이 포함된 조선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하였다”며 이는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 그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비동맹 회의의 “최종문건들에 포함되어 오던 조선관련 조항이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반북)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게 된 현 사태의 반영”이라고 주장

- **北, 美 비난 강화(5/1,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일 ‘미제는 조선침략의 야망을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지난 3월 실시된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합동군사연습 등을 들어 미국이 “도발 준비를 보다 완성”했다며 “제반 사실은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침략 야망을 변함없이 추구하며 우리를 한사코 힘으로 압살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 방송은 미국이 “앞으로도 최신 무장장비들을 동원해서 북침전쟁 연습들을 계속 벌이려 하고 있다”며 “자기를 지키자면 자체의 강력한 힘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조평통, 南, 6.15지지단체 탄압 중지 요구(4/30, 조평통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30일 대변인 담화를 내고 이명박 정부가 “6.15 지지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초래되는 엄청난 후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담화는 남한 법원이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단체 핵심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6.15 지지세력을 전면 말살하려는 매우 위험한 공안 광풍의 전주곡”이라고 비난하면서 남한 당국의 이런 태도는 “북남 선언들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으로, 6.15 지지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파쇼적 폭거”라고 주장하고 이적단체 규정 철회와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

● **北, 한미, 4월 170여회 대북 공중정탐(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군사소식통’을 인용해 국군과 미군이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었던 4월 모두 170여 차례의 “공중정탐 행위”를 했다고 주장, 통신은 국군은 70여 차례, 미군은 100여 차례 대북 공중정찰을 했으며 “북침 전쟁연습과 공중정탐 행위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선제타격하려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의 전쟁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그대로 실증하여 주고 있다”고 비난

● **北, 핵시험·대륙간미사일시험·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 재추진 위협(4/29, 외무성대변인)**

-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힘.
- 외무성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 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
-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그에 따른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 등을 “반공화국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전쟁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켜 핵시험 등이 ‘유엔의 선전포고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논리를 전개

- 성명은 “적대세력에 의해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
- 성명은 의장성명에 따른 제재조치들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적대세력의 갖은 제재와 봉쇄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따위 제재가 절대로 통할 리 없다”고 주장
- 성명은 유엔이 “많은 종류의 군수관련 물자와 자재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 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 시키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 핵 억제력 강화 필요성 절감(4/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제목의 논평에서 북핵 6자회담에 “절대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힘.
- 신문은 6자회담을 “깨진 사발”, “간신히 굴러가는 달구지” 등으로 표현하면서 “6자회담은 ‘의장성명’ 발표와 동시에 존재 가치와 의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북핵 9.19공동성명에 담긴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없는 6자회담,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 등을 노린 그런 회담은 필요없다”고 주장
- 신문은 특히 “일본은 6자회담 마당에 그 정신에 맞지 않는 우리에게 대한 도발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의 의무 이행을 고의로 회피했고 회담의 진전을 막아나서곤 했다”고 말하는 등 일본을 집중 비난

● **北, 유명한 외교 집중 비난(4/28, 노동신문; 4/26, 우리민족끼리)**

- 북한의 주요 언론매체들이 최근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잇달아 집중 비난, 노동신문은 28일 ‘동족대결과 외세공조에 환장한 자의 망동’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유명한 장관의 북한 재처리에 대한 강력대응 발언과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노력을 거론, “외세를 등에 업고 그들의 힘을 빌려 동족을 모해”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



- 신문은 유 장관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문제와 같은 자기 소관도 아닌 북남관계 문제에까지 끼어들어 외세와의 공조로 그에 휘방”을 놓으려 한다고 불만을 표시
- 26일 우리민족끼리도 논평에서 유 장관에 대해 “북핵문제의 진전을 보아가면서 개성공단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느니 선임정권에서 공약한 합의서를 우리가 무조건 이행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느니 하면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부정하는 데 앞장섰다”며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민족 내부문제를 주변 나라들에 들고 다니며 국제화하려고 이성을 잃고” 있다고 비난

● **北, 실천연대 이적 규정, 6·15선언 부정(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북남공동선언을 짓밟는 파쇼적 악행’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최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나고 핵심간부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북남공동선언과 우리민족끼리 이념에 대한 공공연한 부정이고 북남관계 파괴책동”이라고 비난

다. 경제 관련

● **北, 모든 나라 식량 자급자족 필수적(5/5, 조선중앙통신)**

- 유엔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ESCAP) 제65차 총회(4.27-29)에 참석한 북한 대표는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강조하면서 모든 나라의 식량 자급자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
- 북한 대표는 회의 연설에서 “현 시기 가장 심각한 식량위기에 대처해 매개 나라들이 자급자족의 원칙에서 알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림으로써 국내식량수요를 자체로 충족시키고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 발전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 **北농촌, 봄철 영농작업 분주(5/4, 연합)**

- 북한 농촌지역이 벼 냉상모판(보온못자리) 씨뿌리기와 옥수수 이앙작업, 논·밭갈이 등 봄철 영농작업으로 분주, 일반적으로 3월 중순경 벼 냉상모판에 씨를 뿌려 5월 초 중순 무렵부터 모내기를 하고 있으며, 옥수수는 직파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4월 초순경부터 ‘영양단지(비닐포터)’에 파종한 뒤 4월 하순 이앙작업을 시행

● **국제상품전람회 5월 11-14일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제12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11일부터 14일까지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 전람회에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독일, 말레이시아, 시리아, 스웨덴, 싱가포르, 호주, 오스트리아, 영국,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타이, 프랑스, 터키,



대만의 회사들이 참가하며, 공작기계, 전기·전자설비, 운전기재, 석유화학제품, 의약품, 일용품, 식료품 등이 출품

● 北, 세계적 식량난 다시 강조(4/30, 조선중앙방송)

- 북한이 춘궁기를 앞두고 식량난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선중앙방송이 30일 현 식량 위기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 방송은 “세계적으로 식량위기가 계속 악화되어 국제사회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면서 “유엔은 2010년에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량이 줄어드는 반면 식량 가격은 지금보다 30~50%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소개
- 방송은 이러한 세계적 식량난의 원인으로 “혹심한 이상기후의 후과”를 들고 “미국과 서방 나라들이 국제사회의 항의와 규탄에도 불구하고 알곡(곡물)을 이용한 생물연료 생산에 계속 열을 올리고 있어 세계 식량 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미국 책임론’도 내세움.

라. 군사 관련

● 北, 대미·대남 사이버전 전담부대 운영(5/5, 연합)

- 정보당국은 4일 북한이 인터넷을 수단으로 대남, 대미 첩보를 수집하고 전산망을 교란하는 사이버전 전담부대인 ‘기술정찰조’를 확대 편성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힘. 이 부대는 인민군 총참모부 정찰국 소속으로, 군 컴퓨터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평양의 지휘자동화대학 졸업생 위주로 100여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보당국은 “이 부대의 임무는 군사관련 기관들의 컴퓨터망에 침투해 비밀자료를 해킹하는 등 정보유통체계를 장악하는 한편 필요시 바이러스를 유포해 전산망을 마비시키는 것”이라며 “펜티엄 IV급 등 고성능 컴퓨터를 이용한 고속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언급
- 북한군은 과거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미군 인터넷과 첨단 C4I(지휘통신) 체계 교란을 위한 자료 축적에 관심을 가지다가 현재는 사이버전 수행과 군 정보화체계 확립에 주력하고 있다고 당국은 소개

마. 사회·문화 관련

● 北, 신종플루 대비 방역사업 강조(5/3, 조선중앙TV)

- 북한은 3일 세계적으로 신종 인플루엔자A[H1N1](신종플루)의 확산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크다면서 방역사업을 철저히 할 것을 강조, 북한 의학과학원 의학과학정보센터 소장인 로문영 박사는 이날 조선중앙TV와의 대담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국경지대를 비롯해 모든 지역들에서 돼지독감(신종플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역사업을 철저히 하는 것과 함께 누구나 돼지독감에 대한 상식들을 잘 알고



그 예방사업에 적극 펼쳐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

● **北사찰서 부처님오신날 법회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각지 사찰에서 2일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 봉축 ‘조국 통일기원 북남 불교도 동시법회’가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법회에는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와 각 도·시·군위원회 교직자, 해당 사찰의 주지와 승려, 신도들이 참가
- 법회 예식에 이은 연설에서는 남한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6.15공동선언 발표 후 좋게 발전하여온 북남관계가 전쟁 접경의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불교도들이 화합해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할 것을 호소했다고 통신은 소개, 법회에서는 “북남 전체 불교도들의 일치한 염원을 담은 조국통일기원 공동발원문이 봉독됐다”고 통신은 전언

● **北, 세계미술사연맹 가입 추진(5/2, 조선신보)**

- 북한이 세계미술사연맹(FISM) 가입을 추진, 북한 미술의 국제무대 진출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신문에 따르면, 4월 평양을 방문한 도미니코 단테 FISM 부위원장은 북한 미술사들의 수준에 감탄하면서 “조선(북한)의 FISM 가맹을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고 ‘조선요술협회’의 김택성(74) 회장이 전언
- 북한은 2006년에도 FISM 가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었는데 당시에 “요술(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맹국의 찬동을 얻는 문제가 걸렸다”고 김 회장은 언급, 올해 FISM 총회는 오는 7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릴 예정
- FISM에 가입하면 연맹 대회 등 “국제적인 요술 축전의 정식 프로그램”에 출연할 권리를 가지며 가맹국들은 “요술의 세계적 발전추세에 관한 각종 자료들을 서로 교환, 공유”함.
* 북한은 미술을 ‘요술’이라고 부르며, 2001년 10월 ‘조선요술협회’를 설립

● **北도 SI에 대해 국가적 대책 논의(5/1, 조선신보)**

- 북한은 세계보건기구(WHO)의 돼지인플루엔자(SI) 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국가적인 대책들”에 나섰다고 조선신보가 1일 보도, 북한은 4월 28일 김영일 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비상방역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대책을 논의, 이 회의에선 북한엔 현재 SI 감염 사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항과 항만 등에서 위생검역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홍순광 보건성 국가위생검역원 부원장이 설명
- 홍 부원장은 “(SI) 발생지역을 비롯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에 대한 위생검역을 강화하며, 국내 인민들에게 새롭게 제기된 질병에 대한 선전을 긴급 조직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고 소개



- **北, 120여만개 연관어 사전 출간(4/29, 조선신보)**
 - 북한에서 글을 쓸 때 특정 어휘에 관한 표현이나 성구, 속담 등을 참고할 수 있는 ‘조선말연관대사전’이 편찬됐다고 조선신보가 보도, 평양외국어대학의 민영화(68) 연구사가 20여 년 간 작업해 편찬한 사전에는 사회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어휘 2여만개가 올림말로 수록됐고 이들 어휘는 “그에 해당하는 합친말(합성어), 동의어, 반의어, 대립어, 파생, 내용, 상식 등 98개 부류와 연관”지어져 있으며, 자모순서에 따라 배열된 연관어들은 모두 120여만개에 달한다고 소개

- **北, 올해 중앙식물원 전면 개보수(4/30,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중앙식물원을 전면 개보수한다고 조선신보가 30일 보도, 지난 27일 착공식을 가진 이번 공사를 통해 6천㎡ 규모의 온실이 새로 건설되고 각종 화초를 키우는 재배실과 원예도구 판매점, 원예지식 보급실, 청량음료점 등도 세워지며, 식물원내 수천m의 도로가 아스팔트로 포장되며 인도에는 컬러블록이 깔린다고 신문은 설명
 - * 중앙식물원은 1959년 4월 개원한 북한 최대 식물원으로 약 2천여종의 식물이 전시·재배

- **평양 거리 색단풍나무로 단장(4/29, 조선신보)**
 - 북한이 최근 평양시 단장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평양의 주요 거리들이 색단풍나무로 단장된다고 조선신보가 29일 보도
 - 신문은 “색단풍나무가 도시의 원림 효과에 매우 좋은 식물인데 번식이 쉽지 않아 지난 시기에는 원림 조성에 대대적으로 이용되지 못하였다”며 “씨앗으로 번식시키면 80% 이상 변이됐고 눈점으로 번식시키면 사름률(생존율)을 20~30% 밖에 보장할 수 없었다”고 소개

- **北, 고전문학 번역·윤색 적극 추진(4/27, 조선신보)**
 - 최근 북한에서 “선조들의 반침략, 반봉건 투쟁”을 소재로 한 장편·중편 역사문학이 잇따라 창작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작가동맹중앙위원회 고전문학분과위원회의 작가들은 장편 사화 ‘문익점’, ‘임진의 메아리’, ‘국강상의 전설’과 중편 사화 ‘삼포왜란’ 등의 집필을 끝냈으며 ‘천군록’, ‘증명’, ‘경천사 현대리석담’ 등의 작품을 집필 중임.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북 유엔대표부, 6자회담 재개 완전히 배제 안 해(5/5, 연합)**
 -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은 6자 회담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유엔의 주장을 일축하면서도 언젠가 협상을 재개할 것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음.
 - 박 차석대사는 “우리는 절대 6자회담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의 주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6자회담에 참가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언급, 그러나 박 차석대사는 계속 이어지는 답변에서 어떤 조건이 충족될 경우 협상 재개를 배제하지 않을 것처럼 언급
 - 그는 미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멈추면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적대감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반복해 언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정책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이것인 주요 쟁점이다”라고 언급

- **美 보즈워스, 내주 한국 등 방문(4/30, 연합)**
 - 외교 소식통은 30일 “보즈워스 대표가 다음주부터 6자회담 참가국 순방에 나설 계획”이라고 소개, 이번 순방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한을 제외한 모든 6자회담 참가국이 포함되며 한국은 내주 후반께 방문할 것으로 전해짐. 보즈워스 대표가 이번 방문기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이 소식통은 전언
 - 보즈워스 대표는 참가국들과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 핵실험 경고 등 최근의 제반 북핵상황을 평가하고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됨.

나. 북·미 관계

- **美위원회, 北종교탄압국 지정건의(5/2, 연합)**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 ‘2009 연례 종교자유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건의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는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9월 종교탄압국을 지정, 북한은 2001년부터 3008년까지 8년째 계속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라 있음.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도 포함
 -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시설과 활동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힘. 또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종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가 취해졌고, 사적·공적 종교활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비밀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처형까지 가능하다"고 지적

-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은 불명확하지만 북한 내 지하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

● 오바마, 여기서 北 억류에 우려표명(5/2, 연합)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억류중인 미국적 여기서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언론자유 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억류중인 2명의 기자와 이란에 억류중인 1명의 기자 문제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힘.

● 美 WMD 조정관, 北, 핵실험 또 할 것(5/2, 연합)

-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비확산 담당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그는 "그것(핵실험)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
-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싸움 걸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그들은 6자회담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참여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 그는 미국은 6자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9개월 이내에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더 이상의 구체적인 근거는 밝히지 않음. 또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매우 화가나 있다"고 전언

● 클린턴, 北 더 깊은 무덤 파고 있다(5/1, 연합)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비난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파고 있다면서 강하게 비판, 또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힘.
- 그는 "그들(북한)은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 파고 있다"면서 "우리는 매우 진지하게 북한의 최근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북측에 명확히 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우리 행정



부는 그들에게 어떤 경제적 지원도 할 관심도 없고, 그럴 의향도 전혀 없다”고 강조

- 그는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예산으로 1억4천여만달러의 배정을 의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지위문제 검토(4/30, 미국무부)**

-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의 최근 거듭된 위협 고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2008년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입장을 유지, 국무부는 이날 ‘2008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부터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하지만 미국은 북한을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열어뒀음.
- 로널드 셸리처 국무부 대테러 담당 조정관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소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not fully cooperating country)라는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무부가 재검토 과정에 있다”고 전언, 그는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수주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셸리처 조정관 대행은 북한 로켓 발사 등 최근 위협 고조 행위는 “대테러 문제와 구체적으로 관계가 없다”고 언급

● **美NSC, 北이 국제의무 준수토록 노력(4/29, 연합)**

-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29일 북한의 2차 핵실험 위협 발표를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난하면서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해머 대변인은 “북한이 자신들의 성명이 무책임하고 도발적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제 사회는 비핵화된 북한을 보기를 일치되게 원하고 있다”고 강조, 그는 “이것이 오바마 행정부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

● **보즈워스, 對北제재 강화 계획 없다(4/28, 연합)**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납북피해자가족회가 밝힘.
- 보즈워스 대표는 제재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피해자가족회 측은 전언



다. 북·중 관계

● 평양서 北·中 친선도시대회 예정(5/5, 조선중앙통신)

- 평양에서 ‘북·중 친선도시대회’가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 통신은 “대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친선 도(성), 시 사이의 관계발전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들을 나누고 앞으로 여러 도시들이 친선관계를 맺고 교류와 협조를 확대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문제를 협의하게 된다”고 소개, 그러나 이 통신은 이번 대회의 구체적인 일정과 행사에 참가하게 될 도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 中과학기술부 부부장 방북(5/4, 조선중앙통신)

- 차오지엔린(曹健林) 부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과학기술부 대표단이 북·중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43차 회의 참가 차 4일 방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北, ‘중국의 날’ 제정(5/4,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중국이 수교 60주년인 올해를 ‘친선의 해’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의 날’까지 제정한 것으로 확인, 조선중앙통신은 4일 “평양 시내 대학생과 조선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이 4일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중국의 날’에 즈음한 친선연환모임을 진행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 ‘중국의 날’이 언제인지는 명시하지 않음.

● 中, 北위협에 ‘대국적 견지’ 강조(4/30, 외교부대변인)

-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공언한 것과 관련, 각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힘.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답변
- 장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6자회담의 진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언급
-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수교 60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 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

● 중국인 신의주 관광 3년여 만에 재개(4/29, 신화통신)

- 단둥을 통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됐다고 신화통신이 29일 보도,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29일 오전 71명



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신의주로 넘어갔으며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둥 주민들이었음.

- 중국인들이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2월 중국인들의 도박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된 이후 처음임. 중국 정부는 최근 단둥을 변경 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중국인들이 여권이나 비자가 없더라도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했음.
-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개된 신의주 관광은 김일성 혁명기념관을 포함해 모두 6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프로그램이며 참가비는 690위안임. 관광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경찰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 한편 중국 정부는 단둥 외에도 러시아 접경지역인 헤이허(黑河), 베트남 접경지역 등을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라. 북·러 관계

● 北-러, 임업분과위원회 의정서 조인(4/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러시아 정부가 27일 평양에서 양국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의정서를 조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인식에는 북측에서 지광해 임업성 부상 등 관계부처 일꾼이, 러시아 측에서 이반 마체로프 공업무역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임업대표단 관계자와 발레리 수히닌 주북 러시아 대사가 참가, 통신은 지광해 부상과 마체로프 차관이 의정서에 각각 서명했다고 전했다. 자세한 의정서 내용은 소개하지 않음.

마. 북·일 관계

● 北,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서 日 철저배제(5/5, 민주조선)

- 민주조선은 ‘군국주의 독사의 전쟁광기’ 제목의 논평에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정세안정은 그 특성과 예민성으로 하여 고도의 과학적 타산과 논리에 기초한 정치적 대응을 요구한다”며 “따라서 모든 국제문제 특히 조선반도 문제 해결과정에는 일본반동들이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 신문은 특히 “이것이 6자회담의 막을 내리면서 우리가 찾게 되는 결론이고 국제사회가 명심해야 할 교훈”이라고 밝혀 6자회담의 “폐기”를 다시 제기

● 北, 日 긴급정보감시체계 한심(5/2, 통일신보)

- 통일신보는 3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둘러싼 일본의 잇따른 오보 사태는 “일본의 긴급정보감시체계라는 것이 얼마나 한심한 수준에 있는가”를 전세계에 드러냈다고 주장
- 신문은 “모든 정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겨우 2천km의 고공감시능력 밖에 없는 일본이 그 이상의 고공능력을 가진 공



화국의 인공지구위성 발사과정을 감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역시 일본은 공화국(북한)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

- **北, 일본에 군사적 위협(4/28, 조선중앙통신; 민주조선; 노동신문)**
 - 북한의 주요 신문들이 28일 일본의 대북 제재 등을 들어 일본에 대해 “폭발의 분화구를 찾아 소용돌이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대일 적개심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명심”하라는 등의 말로 위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소개
 - 민주조선은 ‘일본은 6자회담 파탄의 주범이다’ 제목의 논평에서 가와무라 다케오 일본 관방장관이 북한에 대해 9.19공동성명의 의무준수를 요구하고 6자회담 복귀를 촉구한 것을 가리켜 “6자회담을 깨뜨린 죄악에 대해 사죄”는 하지 않고 “우리 군대와 인민을 고의적으로 심히 자극하고 있다”며 이같이 위협하고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고 보도
 - 노동신문도 ‘무자비한 징벌 타격을 안길 것이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이 대북 단독제재를 결정한 것을 거론, “우리 공화국은 이미 우리에게 대한 그 어떤 제재도 선전포고로 간주할 것이며 그에 대처하여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차례 밝혔다”고 상기시킴.

바. 기타외교 관계

- **체신성대표단 베트남 방문(4/30, 평양방송)**
 - 베트남을 방문하는 심철호 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체신성 대표단이 30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평양방송이 밝힘.
- **베트남, 북한과 전통적 협력관계 강화(4/30, 국영 베트남통신)**
 - 농 드억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29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북한의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을 위해 베푼 연회에서 양국 공산당, 국가 및 국민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뒤 양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의 평화, 안정, 협력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30일 보도
 - 마잉 서기장은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의 구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선을 축하했다고 통신은 전언
 - 김 부국장은 이에 앞서 레 반 중 베트남군 총정치국장과 만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의 문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통신은 보도



3. 대남정세

● 정부, 남북, 2차접촉 위한 협의 중(5/5, 연합)

- 정부는 북측과 4월 21일 개성접촉에 이은 후속 남북 당국 간 접촉의 일정, 의제 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힘.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차기 접촉의 시기, 의제 등에 대한 조율을 마친 뒤 이르면 주 중 북에 공식적으로 회담을 제의할 것으로 보임.
- 남북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차기 접촉을 위한 물밑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정부, 억류직원 상황 매일 간접 확인(4/28, 통일부)

- 정부는 30일째 북측에 억류된 개성공단 직원 유모씨의 안전 상황을 매일 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유씨의 건강 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통일부가 28일 밝힘.
-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현대아산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통해 ‘신변이나 건강, 안전 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성공업지구 내에 있다’는 정도의 상황확인은 매일 이뤄지고 있다”고 밝힘. 이 부대변인은 “물론 직접적인 접견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측의 간접적인 전언을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임.

● 개성접촉 주간 北대남비방 증가(4/28, 연합)

- 남북 간 첫 당국자 접촉이 있었던 지난주 북한 언론의 대남비방 보도 횟수가 오히려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방송들은 여전히 통상적인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4월 넷째 주(20~26일)에는 그 전주에 비해 2배 정도로 늘어났다”고 밝힘.

● 3월 남북교역 작년 대비 31% 하락(4/27, 연합)

-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3.9~20) 기간 북한의 육로통행 차단 등으로 남북관계에 긴장이 조성됐던 지난달 남북교역규모가 작년 3월에 비해 약 31% 감소한 것으로 파악됨.
- 27일 통일부에 따르면 3월 남북교역은 반입 6천773만2천 달러, 반출 4천101만2천 달러로 총 1억874만4천 달러를 기록, 작년 3월(1억5천789만8천 달러)에 비해 31.1% 줄어 들었음.
- 3월 남북교역 중 대북지원을 제외한 상업적 거래 규모는 1억455만8천 달러로, 작년 3월 1억5천27만6천 달러에 비해 3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월간 남북 교역액은 작년 9월부터 7개월 연속으로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하락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핵무기 제조..배치능력은 없어”(5/3)

- 북한은 이미 소량의 핵무기류를 제조했지만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최근 발간된 미국 싱크탱크의 한 보고서가 평가했음. 또 미국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공격적인 외교’가 요구된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음.
- 미국 외교분야 싱크탱크인 ‘외교협회(CFR)’는 윌리엄 페리 전 대북 조정관 등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를 구성, 최근 발간한 ‘미국의 핵무기정책(U.S. Nuclear Weapons Policy)’이라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했음.
- 보고서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통해 소량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핵폭탄의 1세대격인 ‘소량의 핵무기류(a small arsenal)’를 제조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데 이어 2006년 10월엔 소규모 폭발력을 가진 핵장치를 실험했고 올해초에는 플루토늄 비축량에서 핵무기들을 제조했다고 주장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이 비록 2006년 10월 저성능 핵장치를 폭발시켰으나 아직 핵무기를 배치할 능력(the ability to deploy nuclear weapons)은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고 평가했음.
- 보고서는 또 작년에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핵시설 불능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기로 한 점을 언급하며 미국은 북한 핵프로그램 폐기작업이 제대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6자회담 참가국들의 결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페리 전 조정관은 서문에서 “오바마 정부는 새로운 핵무기가 제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북한 핵문제 성공적 해결을 위해선 오바마 정부가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조하는 가운데 전적으로 개입(fully involves)하는 공격적 외교(aggressive diplomacy)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음.
- 보고서는 또 미국은 북한과 협력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왔다면서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안보리 의장성명 발표에 반발, 북한이 지난달 북한에 있던 미국의 핵전문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을 추방한 사실을 예로 들었음.
- 이어 보고서는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검증으로 나아가



는 노력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새 행정부는 상당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거부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한 비핵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음.

- 특히 북한이 6자회담의 결과로 플루토늄 생산을 중단했지만 또다른 핵무기 제조 방식인 고농축우라늄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고농축우라늄을 생산했는지 혹은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고 보고서는 밝혔음.
- 보고서는 또 미국이 1990년대 초 한반도에서 모든 핵무기를 철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한은 한국내 미군 핵무기에 대한 사찰문제를 북한의 핵물질 생산 중단 및 핵무기프로그램 폐기문제의 조건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보고서는 “북한의 지도자들은 미국이 B-2폭격기와 같은 장거리 폭격기나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핵무기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이같은 주장이 허수일 수 있음을 시사했음.
-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핵을 확산하려는 북한과 이란의 도전을 해결하지 못하면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 및 핵무기 생산 능력을 확보하려고 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이란 외무 “북과 핵.미사일 협력 없어”(5/3)

- 이란 외무장관인 마누셰르 모타키는 2일 “북한과 핵 협력을 하고 있지 않다. 미사일 개발은 이란의 기술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3일 전했다.
- 그는 2일 이란을 방문한 나카소네 히로후미(中曾根弘文) 일본 외상과 회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일본에 위협이 된다. 이란과 북한이 핵과 미사일에서 협력한다는 관측이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음.
- 나카소네 외상은 또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 “버락 오바마 미국 정권은 이란과의 대화를 진지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이란의 우라늄 농축 활동 중단 등을 요구했음.
- 이에 모타키 장관은 “우리도 오바마 정권이 무언가 하려고 한다고 느끼고 있다. (상황에 따라) 협력하고 싶다”고 대미 관계개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음. 이어 모타키 장관은 자국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논의해 나갈 방침임을 시사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 北외무상 “6자회담 불참입장 확고부동”(5/2)

- 북한의 박의춘 외무상은 지난달 29일 쿠바에서 열린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 연설에서 “6자회담 불참” 입장을 거듭 밝히고 “강력한 전쟁억제력” 확보에 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음.



- 박 외무상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비난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거론, 이는 유엔 안보리가 “국제법위에 군림하는 강권과 전횡의 도구로 전락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태발전”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9.19 공동성명의 호상 존중과 평등의 정신을 부정해 나선 이상 우리가 참가하는 6자회담은 더는 존재할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 그는 이어 유엔 안보리의 “전대미문의 강권행위에 6자회담 참가국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실은 6자회담이 우리의 무장해제와 굴복만을 노리는 마당으로 화하였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회담에는 다시는 절대로 참가하지 않으며 6자회담의 그 어떤 합의에도 더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조선(북한)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이고 입장”이라고 6자회담 불참입장을 거듭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또 북한은 “절대로 강권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군정치에 의해 마련된 강력한 전쟁억제력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우리가 책임적으로 지켜나갈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 美 WMD 조정관 “北, 핵실험 또 할것”(5/2)

- 6자회담 불참 입장을 밝힌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 전에 추가 핵실험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행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주장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서 비확산 담당 ‘차르’ 역할을 맡고 있는 케리 세이모어 백악관 대량살상무기(WMD) 정책조정관은 1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행사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들이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것(핵실험)이 그들이 우리에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은 지난달 29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장성명 채택 등 대북조치에 반발하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임.
- 세이모어 조정관은 “북한이 싸움 걸기를 원하는 것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그들은 6자회담을 없애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6자회담의 나머지 5개 참여국을 분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그는 미국은 6자회담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북한이 9개월 이내에 협상장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 그는 “우리는 오로지 기다릴 뿐”이라면서 만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다른 주요 강국들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지지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중국은 북한에 대해 매우, 매우 화가나 있다”고 전했다.



● 北 “비동맹회의, 6자회담 불참 北 지지” 주장(5/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달 비동맹운동(NAM) 조정위원회 각료급회의에서 채택된 최종문건에 “6자회담이 포함된 조선관련 조항을 넣지 않기로 하였다”며 이는 참가국들이 6자회담에 불참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이 같이 말하고 지금까지 비동맹 회의의 “최종문건들에 포함되어 오던 조선관련 조항이 이번에 빠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반공화국(반북)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에 의하여 6자회담이 없어지게 된 현 사태의 반영”이라고 말했다.
- 그는 “미국과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까지 끌어들여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적대행위를 감행한 것으로 하여 6자회담과 조선반도의 비핵화 과정은 완전히 파탄되었다”며 “남조선 보수당국의 반동적인 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회의 참가국들이 “조선반도에 조성된 극히 위험천만한 정세에 우려를 표시하고 사멸된 6자회담과 파탄된 남북관계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였다”며 이들 나라가 “조선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더는 필요없게 됐다는 우리의 입장에 이해를 표시”한 것은 북한에 대한 “힘있는 지지”라고 주장했다.
- 북한은 1975년 8월25일 비동맹회의에 가입한 뒤 해마다 참석해 왔으며, 지난달 27~30일 쿠바의 아바나에서 열린 올해 각료급회의에는 남북한 대표가 동시 참석했다.
- 세계 118개국이 참여한 비동맹회의에 북한은 정회원으로, 한국은 1997년부터 ‘게스트’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음.

● “北 현단계서 6자회담 복귀 난망”(5/1)

-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30일 추가 핵실험 등의 위협을 가하며 위기 지수를 올리고 있는 북한이 현 단계에서 6자회담에 복귀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 국무부는 6자회담이 북한의 계속된 불참으로 무력화될 것에 대비, ‘플랜 B’에 해당하는 대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강하게 시사하고 나서 향후 6자회담에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주목됨.
- 클린턴 장관은 이날 상원 세출위원회에 출석,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의 대북비난 의장성명 채택에 반발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와 2차 핵실험 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그들(북한)은 스스로 더욱 더 깊은 무덤을 국제 사회에서 파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클린턴 장관은 “북한이 이 시점에 6자회담에 복귀, 핵시설 봉쇄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전망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6자회담 무산시 대안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



해서는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전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계속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혀 6자회담 기능상실에 대비한 대안을 검토중임을 강하게 시사했음. 그러나 우드 부대변인은 “우리가 ‘플랜 B’를 현재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우리는 지금 북한을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게 하는 노력을 진행중”이라고 강조했다.

- 클린턴 장관은 청문회에서 국무부가 북한 비핵화 예산으로 1억4천여만달러의 배정을 의회에 요청한 것과 관련, 샘 브라운백(공화) 의원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제동을 걸고 나서자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고 핵시설 불능화에 다시 착수할 때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또 클린턴 장관은 미국은 현 상태로는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면서 북한의 최근 도발적 행동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음.

● <베넷 “北, 로켓발사 1년내 또 할수도”>(4/30)

- 미국 랜드연구소의 대북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박사는 30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 “몇 개월 아니면 1년 이내 또 다른 발사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그는 이날 오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주최 ‘한반도 긴장 상황과 연합방위 태세’ 조찬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로켓 발사를) 아직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험적 발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함.
- 베넷 박사는 이어 “그동안 북한이 위성발사를 하면서 치른 대가가 크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도발 사태를 생각해 북한에 어떤 제재를 부과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함. 그는 북한의 핵폐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핵무기는 북한에게 생존과 생계의 수단이자 권력강화의 수단”이라면서 “핵능력이나 핵무기 개발을 전면적으로 포기하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함.
- 베넷 박사는 2012년 한국군에 전환될 예정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놓고는 “적어도 미국에서 실무자들은 전작권 통제권의 전환 시기나 그 이후에 대해 크게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함. 그러면서 “한국에서 북한의 도발이 있어도 미국이 지상군을 충분히 지원할 상황이 안 된다”고 설명한 뒤 “한국의 국방력은 충분히 북한을 상대할 수 있지만 지상군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함.
- 베넷 박사는 한반도의 긴장 고조 상황에서 중국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중국이 역내(동북아시아)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답함.

● “北 위협은 고립만 심화시킬뿐”(4/30)

- 미국 국무부는 29일 북한이 2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하겠다고 위협하고 나선 데 대해 “핵실험 위협 등은 북한을 더욱 고립시킬 뿐”이라면서 “북한은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함.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해 다른 참가국들과도 협력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정책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북한과 북한 주민들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함.

- 우드 부대변인은 또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사과 요구에 대해 “안보리가 사과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북한의 요구를 일축함. 이어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국 있다”며 “그들은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중국과 러시아 등의 적극적인 중재·설득 노력을 우회적으로 촉구함.
-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여부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우리의 관심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결정을 반복하고 핵폐기 문제를 계속해서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로 돌아오는 것”이라며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거듭 촉구함. 우드 부대변인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2명의 미국 여기자 문제와 관련, “새로 진전된 내용이 없다”고 말함.
- 앞서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가 북한 기업 3곳을 제재대상기관으로 지정한 데 대해 강력 반발,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실험과 ICBM 발사실험을 할 것이라고 위협함. 외무성은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며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용될 수 있는 우라늄 농축 기술개발에도 착수할 것임을 시사함.

● “美, 北도발 무시해야..더 이상 뇌물 안돼”<WP>(4/30)

-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29일 북한의 핵활동 재개 선언 등 잇단 위협 고조 행위와 관련, “북한이 또 한 번 미국 대통령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원칙에 입각한 대응을 주문함.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맞은 이날 “더 이상의 뇌물은 안된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얻기 위한 북한의 움직임이 계속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함.
- 신문은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억류중인 미국인 기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한다”면서도 “김정일에 또 한 번 함몰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함.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거래를 중단시키려는 다자 노력에 한국의 참여를 이끄는 가운데 (미국이)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북) 금융제재를 부활하고 강화하는 것이 더 좋은 대응”이라고 밝힘.
- 또 “미국보다 더 많은 수단을 갖고 있는 중국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더 압박해야 하고, 중국내 탈북자들도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 신문은 “간단히 말하면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긴급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북한의 예측할 수 없는 행동에 굴복해서는 안된다’는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발언을 상기시키며, 최근 일련의 북한의 위협 고조 행위로 인해 “이런 입장에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함.
- 신문은 “독재자 김정일은 한국과 일본 및 다른 미국의 파트너를 제외한 채 오바마 행정부가 자신들과 양자 회담을 갖고, 영변 핵시설의 재폐쇄 및 미국인 인질(기자) 석방을 조건으로 경제적·정치적 뇌물을 주기를 원할 것”이라면서 “이미 김정일은 미국의 두 대통령을 상대로 영변 폐쇄를 팔아먹는데 성공했다”고 지적함.
-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유화적 입장을 거듭 내비치고 있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파트타임 특사’라고 거명하면서 “불행하게도 보즈워스 특별대표는 양자대화를 공개적으로 제안하고 이를 통해 6자회담을 격하시킴으로써 북한의 조악한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비판함.

● 中·日 총리 “북핵문제에 과잉반응 삼가야”(4/30)

- 중국과 일본 양국 총리들은 29일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갈등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일본 정부의 한 관리가 밝힘.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렇게 전함.
- 이 관리는 “두 총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갈등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함.

● 北 “핵시험·ICBM 시험” 위협(4/29)

- 북한 외무성은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의장성명 등 대북조치에 대해 “즉시” 사죄하지 않으면 “자위적 조치”로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시험을 할 것이라고 밝힘.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또 “경수로발전소 건설을 결정하고, 첫 공정으로 핵연료를 자체로 생산보장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체없이 시작할 것”이라고 밝혀 우리나라 농축 기술개발에 들어갈 것임을 시사함.
- 유엔 안보리가 의장성명 등에 대해 사과하거나 철회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번 성명에서 밝힌 강경한 위협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돼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어 제3차 북핵 위기로 고조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은 특히 이번에 핵시험 뿐 아니라 ICBM 발사시험과 우리나라 농축기술 개발까지 포함시킨 복합적인 위협을 가함으로써 미국에 대해 핵문제를 넘어 한반도와 동북아지역 전체의 근원적이고 포괄



적인 안보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임. 북한이 경수로발전소의 핵연료를 자체 생산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우리농축축 기술을 본격 추구하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이란처럼 고농축우라늄(HEU)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것으로 보임.

- 성명은 유엔 안보리의 의장성명과 그에 따른 북한의 3개 회사에 대한 제재 결정 등을 “반공화국 제재를 실동에 옮기는 불법무도한 도발행위”라고 규정하고 “1990년대에 우리는 이미 조선정전협정의 법률적 당사자인 유엔이 우리에게 제재를 가하는 경우 그것은 곧 정전협정의 파기 즉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선언한 바 있다”고 상기시켜 핵시험 등이 ‘유엔의 선전포고에 따른 자위적 조치’라는 논리를 폈음. 성명이 유엔을 1953년 정전협정의 당사자라고 상기시킨 것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 성명은 “적대세력에 의해 6자회담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화의 염원은 영원히 사라지고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는 엄중한 사태”라고 현 상황을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당장 사죄하고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채택한 모든 반공화국 결의와 결정들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함. 성명은 의장성명에 따른 제재조치들에 대해 “지난 수십년간 적대세력의 갖은 제재와 봉쇄 속에서 살아온 우리에게 이따위 제재가 절대로 통할 리 없다”고 주장함. 성명은 유엔이 “많은 종류의 군수관련 물자와 자재들을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입 금지품목으로 공식 지정”한 것은 “우리 공화국의 최고이익인 나라와 민족의 안전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적대세력은 6자회담을 통해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자 이제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국방공업을 질식시켜보겠다는 망상을 하고 있다”고 주장함.
- 북한은 의장성명이 나온 지난 14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6자회담 절대 불참과 경수로발전소 자체 건설 검토입장을 밝혔으며 안보리 제재위원회에서 북한 3개 기업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 25일에는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시작하고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할 것이라고 발표했었음.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3일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재처리에 들어가면 이는 지금까지 북한이 얘기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를 더욱 엄격히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밝혀 북한문제를 둘러싼 국제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내달 NPT회의서 北복귀 촉구예정(4/27)

- 정부는 다음달 4~15일 뉴욕에서 열리는 ‘2010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평가회의를 위한 제3차 준비회의’에서 북한의 NPT 복귀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오 준



다자외교조정관이 회의에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오 조정관은 기초연설을 통해 북한의 NPT복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함.

- 북한은 2003년 1월 정부 성명을 통해 NPT탈퇴를 선언했었음. 오 조정관은 또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 폐연료봉 재처리에 돌입한 과정을 소개하고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한 비핵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표명할 것으로 전해짐.
- 문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준비회의는 버락 오바마 정부 출범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NPT회의로 국제군축, 비확산 분야의 진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열려 주목된다”고 밝힘. 오 조정관은 또 회의 참석에 앞서 워싱턴에서 로즈 고테필러 국무부 검증·군축담당 차관보 등을 만나 군축·비확산 정책 전반에 걸쳐 협의할 예정임.
- 오 조정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방침을 소개하고 적절한 시기에 가입을 발표할 것이라는 점도 설명할 것으로 보임. 오바마 미 대통령은 국정어젠더의 하나로 NPT강화를 천명했으며 “북한과 이란처럼 NPT를 위반한 국가는 자동적으로 강력한 국제 제재를 자동 부과토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함.

● 北신문 “핵억제력 강화 필요성 절감”(4/29)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북핵 6자회담에 “절대 불참”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자주권 침해”로 규정하며 핵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힘. 이 신문은 ‘천만번 정당한 자주권 행사’ 제목의 논평에서 6자회담을 “깨진 사발”, “간신히 굴러가는 달구지” 등으로 표현하면서 “6자회담은 ‘의장성명’ 발표와 동시에 존재 가치와 의의를 완전히 상실했다”며 북핵 9.19공동성명에 담긴 “자주권 존중과 주권평등의 정신이 없는 6자회담, 우리 나라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우리의 무장해제 등을 노린 그런 회담은 필요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특히 “일본은 6자회담 마당에 그 정신에 맞지 않는 우리에게 대한 도발적인 문제들을 들고 나오면서 자기의 의무 이행을 고의로 회피했고 회담의 진전을 막아나서곤 했다”고 말하는 등 일본을 집중 비난함.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6자회담에 더는 관심이 없고 흥미가 없다”고 신문은 말하고 “적대세력들은 한다면 끝까지 하고 안한다면 절대로 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투철한 의지와 정신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불참입장의 변복이 없을 것임을 강조함.
- 이어 신문은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핵억제력 강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절감했다”며 “구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는 자위를 위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日, 北 핵 재처리 시작 확인” <산케이> (4/29)

-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위한 활동을 시작한 것을 일본 정부가 확인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 영변의 핵 시설에 대한 정보를 분석한 결과 북한이 사용 후 핵연료봉의 재처리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판명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르면 3개월 이내에 핵실험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미군도 대기 중의 먼지 등을 수집, 핵실험 여부를 파악하는 기상관측기 ‘WC135C’를 일본 오키나와(沖繩) 가데나(嘉手納) 기지에 배치, 빈번히 감시 비행을 벌이는 등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있음.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실험을 실시함. 당시 실험 장소는 길주군 풍계리 부근의 지하 핵실험장으로 각국 정보 당국은 보고 있음.
- 북한은 2006년 7월 5일 대포동 2호를 포함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10월에 핵실험을 강행한 적이 있는 만큼 일본 정부는 이번에도 이르면 로켓 발사 3개월 뒤인 7월께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있음.

● 보즈워스 “對北제재 강화 계획 없다” (4/28)

- 스티븐 보즈워스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국이 당장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고 납북피해자가족회가 밝힘. 미국 정부에 북한 납치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이즈카 시게오(飯塚繁雄.70) 납북피해자가족회장은 27일(이하 현지시간) 국무부에서 보즈워스 대표를 면담한 뒤 “보즈워스 대표가 우리와 생각이 좀 달랐다”며 이같이 전함.
- 방미단에 포함된 다른 일본인 납북 피해자 가족은 가족회가 미국 측에 금융제재를 포함해 대북 제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북한을 미국 정부의 테러지원국 명단에 다시 포함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함.
- 이에 대해 보즈워스 대표는 제재 조치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지금 시점에서 북한에 추가 제재를 가할 의도가 없다고 말했다고 피해자가족회 측은 전함.
- 하지만 납북피해자가족회 관계자는 “지난 10여 년 간 북한과 싸우면서 우리는 압력 없는 대화는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다고 말해왔다”며 미국 측의 미온적인 답변에 실망감을 표시함.
- 보즈워스 대표는 그러나 미국이 일본인 납치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들은 덧붙였음. 한편, 납북피해자가족회 방미단이 보즈워스 대표를 면담한 자리에는 북핵 6자회담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성김 대북특사도 배석함.



나. 미·북 관계

● 美 90대 한인 “北가족 상봉” 美의원에 호소(5/3)

- “북한의 고향을 떠난 지 이제 60년이 돼가는데 북에 두고온 가족을 만날 수 있게 의원님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98세인 재미교포 리근 씨는 6.25 전쟁 때 북한에 두고 떠나온 부인과 6남매를 상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미 하원의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에게 요청했음.
- 2007년 미 의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이 채택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혼다 의원을 뉴욕·뉴저지의 한인들이 후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혼다 의원을 만난 리씨는 자신의 절박한 사정을 호소했음.
-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리씨는 전쟁 중이던 1950년 10월 한달 정도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부인과 3남3녀를 남겨둔 채 미군을 따라 홀로 월남했지만 이후 고향에 돌아가지 못해 60년 가까이 헤어진 가족들을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음. 리씨는 혼다 의원에게 “고향에 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자나깨나 고향에 갈 생각뿐입니다. 여러분이 힘있는 데까지 도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며 거듭 도움을 호소했음. 그동안 여러차례 가족 상봉을 시도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한 리씨는 자신의 사연을 적은 서한도 혼다 의원에게 전했다.
- 혼다 의원은 미국내 한인들이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고 이산가족이 얼마나 많고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본격화해야 할 때라고 밝혔음.
- 미 상원과 하원은 2001년에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작년 1월에는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미 정부가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국방관련 법안에 조지 부시 당시 대통령이 서명에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음. 법안은 미 대통령이 법안 발효 180일 이내에 의회에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음.

● “北, 노동당→군부 권력이동” <美방송>(5/2)

- 북한의 권력이 노동당에서 군부로 이동하고 있다고 미국의 폭스뉴스가 1일 보도. 폭스뉴스는 이날 ‘권력 이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한이 새로 선출된 국방위원회 구성원 전원의 얼굴 사진을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공개한 것을 예로 들며 이같이 분석했음. 폭스뉴스는 “김정일의 군에 대한 새로운 강조는 최근 일련의 인사와 조직 개편에서도 드러난다”면서 “최근의 변화 중 가장 의미있는 것은 군 최고기관인 국방위원회의 권한과 위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평가



했음.

- 방송은 국방위 위상 강화의 예로 노동당 작전부장인 오극렬이 국방위 부위원장에 새로 임명되고, 작전부의 감독권이 당에서 군으로 바뀐 점을 지적했음. 또 국방위가 대남공작전담부서인 대외연락부의 평양 건물 등을 접수한 것도 예로 들었음.
- 브루스 벡톨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 교수는 최근 북한의 인사는 권력교체를 앞둔 상태에서 김정일이 누구를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음. 그는 “김정일이 군을 더 믿고, 아마도 그의 오랜 친구인 오극렬을 당의 누구보다도 더 믿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고 했음. 특히 방송은 김정일의 셋째 아들 김정운이 지난주 국방위 중간 직책에 임명된 뒀을 수 있다는 점은 중요한 사태 진전이라고 지적했음.
- 벡톨 교수는 김정일이 오극렬과 장성택 당 행정부장에게 김정운이나 다른 아들 중 한 명을 후계자로 키우는 후견인의 권한을 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음. 그는 또 북한이 국방위원 전원의 사진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북한이 국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를 원한다는 의미”라고 분석했음.
- 미국의 싱크탱크인 ‘스트랫포 글로벌 인텔리전스’의 로저 베이커도 “국방위가 확실히 북한의 핵심 지도 기구로 굳어졌다”면서 “김정일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더라도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음.

● 오바마, 여기자 北역류에 우려표명(5/2)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이란에 역류중인 미국적 여기자 3명 문제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세계 언론자유의 날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에 역류중인 2명의 기자와 이란에 역류중인 1명의 기자 문제에 대해 “특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음.
-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는 이란에 있는 룩사나 사베리, 북한에 있는 유나 리와 로라 링과 같은 해외에 역류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특히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그는 또 중국과 쿠바, 미얀마, 스리랑카, 짐바브웨 등을 포함한 전 세계 국가에서 언론인들이 몹시 시달리고 감옥에 가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슬픈 현실”이라고 말했음.
- 미국의 ‘커런트 TV’ 소속인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는 지난 3월 북-중 국경지역의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 등을 취재하던 중 북한군에 체포돼 지금까지 역류상태에 있음.

● 美위원회, 北종교탄압국 지정건의(5/2)

-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1일 ‘2009 연례 종교자유보고서’ 발표를 통해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 중국, 이라크 등 13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



- 해 줄 것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국무부에 건의했음.
-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령(IRFA)는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국가를 지정토록 하고 있으며, 미 국무부는 종교자유 위원회가 조사한 연례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9월 종교탄압국을 지정하고 있음. 북한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째 계속 종교탄압국 명단에 올라 있음.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된 된 국가에는 이란,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에리트레아도 포함됐음.
 -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라면서 “북한의 종교 시설과 활동은 완전한 통제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주로 외국의 종교단체나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용된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는 종교 활동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새로운 안전조치가 취해졌고, 사적·공적 종교활동은 금지되고 있으며, 비밀종교 활동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처형까지 가능하다”고 지적했음.
 - 또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되는 탈북자의 경우 종교적 믿음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거나 한국의 종교단체와 잦은 접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날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탈북자들의 증언과 믿을만한 보고에 따르면 정확한 상황은 불명확하지만 북한 내 지하 종교활동이 늘어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음.
 -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 같은 북한의 종교탄압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종교자유를 포함한 인권 문제를 향후 6자회담 재개 등 북한과의 협상시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오바마 정부에 권고했음. 이와 함께 북한인권법에 따른 대북인권특사의 완전한 활동을 요구하는 동시에 탈북자들을 국제적 의무에 걸맞게 보호하도록 미국 정부가 중국에 촉구하는 등 탈북자 보호, 지원활동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음.
 - 위원회는 의회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 및 전문가 등으로 상·하 양원 합동 실무그룹을 구성, 동북아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건의했음. 또 북한인권법에 따른 예산을 지속적으로 배정하고, 북한을 방문하는 미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북한의 종교자유 및 인권과 관련한 우려를 계속 표명하는 한편 북한 형무소에 대한 국제적 감시단의 접근을 허용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음.

● 美, 北 ‘대테러 비협력국’ 지위문제 검토(5/1)

-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의 최근 거듭된 위협 고조 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입장을 유지했음. 국무부는 이날 ‘2008년 테러보고서’ 발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거듭 지정했음. 북한은 지난해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



된 뒤 이번 보고서에서부터 테러지원국에 포함되지 않았음.

- 로널드 설리처 국무부 대테러 담당 조정관 대행은 기자들의 질문에 “소위 (대테러 노력에) 협력을 완전히 하지 않는 국가(not fully cooperating country)라는 북한의 지위에 대해 국무부가 재검토 과정에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이 수주 내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매년 5월 관보를 통해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른 대테러 비협력국을 지정해 오고 있으며, 북한은 2007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됐음.

● 美 “탈북자 미국정착, 보호노력 계속”(5/1)

- 미국은 30일 탈북자 보호를 위해 미국 내 정착 지원을 포함한 탈북자 보호 노력을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들과 계속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워싱턴 D.C.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와 관련한 성명 발표를 통해 “미국은 고향을 탈출한 북한 주민들의 곤경을 깊이 우려하고 있다”면서 “미국 내 정착 방안을 포함해 이들의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 국가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드 부대변인은 또 “국무부의 연례 인권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참함을 지적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종교와 정치의 자유를 계속 제한하고 있으며, 정보와 주민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사회 통제를 실시하는 한편 여성과 소녀들의 인신매매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그는 이번 북한자유주간 행사 참석차 방미한 탈북지들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이들의 용기있는 정신은 우리 모두가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의 중요성을 기억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 문타폰 “北인권상황 긴급한 관심 필요”(4/29)

- 비릿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8일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 상황은 모든 수준에서 긴급한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촉구함. 문타폰 특별보고관은 이날 워싱턴 D.C.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북한인권상황 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식량과 기본 생필품 및 여성과 어린이 등 특정 그룹과 관련돼 특별히 우려된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단기 대책과 관련, “해외로의 망명을 시도하다가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람들에게 대한 처벌을 종식해야 하며, 이들을 구금하거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말도록 당국자들에 지시해야 한다”고 주장함. 또 “법률 개혁을 통해 공개처형을 중단하고, 인권과 자유 침해를 종식해야 한다”면서 “외국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에 촉구함.
- 그는 이어 지원이 필요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식량과 다른 필수



품의 공급 및 접근보장의 중요성도 강조함. 이와 함께 장기적 대책으로 국가시스템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를 보장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국가의 시스템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함. 이밖에 “북한은 선군 정책이 아니라 선민(People first) 정책에 기초해야 한다”면서 “국방비를 포함한 국가예산을 사회 분야에 재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미군, 대북 알루미늄수출 기업과 조달계약” <RFA>(4/28)

- 미국 육군이 핵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알루미늄관을 북한에 밀수출하려던 독일 기업에 수백만 달러를 지급했다가 회계감사원(GAO)의 지적을 받았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함.
- 이 방송은 회계감사원이 최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 “육군이 핵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을 북한에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독일 기업에 2006년 4백만 달러를 부당하게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힘. 방송에 따르면 미 육군의 유럽 군수사령부는 지난 2003년 3월 독일의 민간기업과 군수조달용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독일 기업은 2004년, 이중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알루미늄관을 프랑스 선박에 실어 동남아를 통해 북한으로 밀수출하려다 독일 세관에 적발돼 2005년 이 기업의 대표가 교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이에 따라 같은 해 7월 미국 육군은 이 기업을 조달 계약 금지 업체로 지정했지만 2006년 군수사령부측은 기존계약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문제의 독일 업체와 계약을 1년 연장함.

다. 중·북 관계

● 中, 北위협에 ‘대국적 견지’ 강조(4/30)

- 중국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실험을 공언한 것과 관련, 각국이 대국적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주변국을 위협하는 것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즉답은 하지 않은 채 이같이 말했음. 장 대변인은 “우리는 유관 당사국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6자회담의 진전을 공동으로 수호하길 희망한다”며 “중국은 각국과 함께 한반도의 비핵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음.
- 그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수교 60주년을 맞은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음.



● 중국인 신의주 관광 3년여 만에 재개(4/30)

- 단둥을 통한 중국인들의 북한 관광이 중단된 지 3년여 만에 재개됐다고 중국 관영 언론이 29일 보도함.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1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의 신의주로 넘어감. 관광객들은 대부분 단둥 주민들이었음.
- 중국인들이 북한 관광에 나선 것은 지난 2006년 2월 중국인들의 도박 열풍을 차단하기 위해 중단된 이후 처음임. 중국 정부는 최근 단둥을 변경 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중국인들이 여권이나 비자가 없더라도 북한 변경 관광에 나설 수 있도록 함.
-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날 재개된 신의주 관광은 김일성 혁명기념관을 포함해 모두 6개 관광지를 둘러보는 당일 프로그램이며 참가비는 690위안. 관광을 희망하는 중국인들은 개별적으로 경찰 당국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음. 한편 중국 정부는 단둥 외에도 러시아 접경지역인 헤이허(黑河), 베트남 접경지역 등을 변경여행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음.

라. 일·북 관계

● 일본인 ‘北인권문제 해결촉구’ NYT 광고(4/28)

- 일본인들이 북한의 일본인 납치 사례 및 북한내 인권 탄압 문제 등을 들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북한의 인권문제 해결에 자신들과 함께 나서자는 내용의 전면광고를 뉴욕타임스(NYT)에 게재함. 다카세 히토시씨 등 7명의 일본인은 28일 NYT에 ‘북한이라는 이름의 지옥을 그냥 놔둘 것입니까’라는 제목의 전면광고를 내고 “우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인권 탄압 해결에 함께 나서기를 요청한다”고 밝힘.
- 이들은 1977년 13살의 나이에 납북된 요코타 메구미 등 일본인들의 납북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와 일본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진실을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납북자들의 부모들이 이제 늙거나 일부는 숨진 현실에서 가족들은 이들의 귀국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호소함.
- 이들은 또 북한은 다른 나라의 무고한 사람들도 납치했음이 확실하고 미국 영주권자인 김동식 목사도 탈북자들을 돕다가 납치됐다면 북한은 외국인 납치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함. 이들은 북한의 외국인 납치는 노예 같은 삶을 강요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심각한 위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유엔이 매년 총회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지만 개선되는 조짐은 없으면서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것을 촉구함.
- 특히 이들은 수단의 다르푸르 학살사태와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단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을 거론하면서 ICC가 북한에 대해서도 확실한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이



들은 인권의 보호가 북한의 핵 위협을 완전하게 제거하는데도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진정한 민주국가로 바뀔 수 있도록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들과 협력할 것을 호소함. 이들은 수천명의 일본인들의 도움으로 이 광고를 게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하고 이 광고와 같은 메시지가 백악관에도 보내졌다고 밝힘.

마. 기타

● 싱크탱크 ICG “북한 상황, 계속 악화”(5/3)

- 정치·외교적 분쟁에 특화된 싱크탱크 국제위기그룹(ICG)이 3개월 연속 북한을 ‘상황 악화’ 지역으로 분류, 한반도를 휘감은 불안정한 기류에 우려의 시선을 보냈음.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ICG는 지난 1일 발표한 월레 보고서에서 로켓 발사, 6자회담 거부 및 2차 핵실험 위협, 국제원자력기구(IAEA) 검증팀 추방, 미국인 기자 억류 등 북한의 일련의 행보가 우려를 자아낸다고 평가했음. 또 일본의 일방적인 대북 경제제재 연장, 북한의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재개 선언도 대표적 정치·외교 분쟁 지역인 북한의 상황을 우려케 하는 사건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ICG는 핵 신고가 이뤄진 직후인 작년 7월 보고서에서 북한을 ‘상황 호전’ 지역으로 분류했다가 9월 IAEA 검증팀의 영변 핵시설 접근 차단, 핵 재처리시설 재가동 선언 등 악재가 터지자 10월 보고서에서 다시 상황 악화 지역으로 분류한 바 있음. 이후 ICG가 지난 3월 보고서부터 3개월 연속 북한을 상황 악화 지역으로 분류함으로써 올 들어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하는 형국임을 확인시켰음.
- 한편, 지난 1일 발표된 ICG 월레 보고서에서 상황 악화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북한 이외에 피지, 케냐, 몰도바, 네팔, 스리랑카, 태국 등이며 국교정상화 로드맵에 합의한 아르메니아-터키는 상황 호전 지역으로 분류됐음.

● 베트남 “북한과 전통적 협력관계 강화”(4/30)

- 농 드억 마잉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북한과의 전통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힘. 마잉 서기장은 29일 베트남을 공식 방문 중인 북한의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을 위해 베푸 연회에서 양국 공산당, 국가 및 국민간의 관계 증진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한 뒤 양국이 동북아시아와 세계에서의 평화, 안정, 협력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국영 베트남통신(VNA)이 30일 보도함.
- 마잉 서기장은 또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의 구성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재선을 축하했다고 이 통신은 전함. 이에 대해 김 부국장은 김 위원장의 안부를 전한 뒤, 베트남과의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함. 김 부국장은 이에 앞서 레 반 중 베트남군 총



정치국장과 만나 정치, 경제, 사회, 국방 등의 문제와 공통 관심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이 통신은 덧붙였다.

- 2007년 제1부국장에 임명된 김정각은 고령에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조명록(81)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 김 부국장은 중 총정치국장의 초청으로 베트남을 방문 중임.
- 1950년 1월 수교한 북한과 베트남은 1967년 무상군사지원 및 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했고, 북한은 베트남전 때 공군 파견과 군수물자 지원 등으로 '혈맹' 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1979년 북한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해 관계가 악화됐으며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후 더욱 소원해짐. 양국은 2001년 7월과 2002년 5월 각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쩌 드억 링 베트남 주석의 상호 방문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으며, 지난해 10월 마잉 베트남 서기장의 방북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기도 함.
- 양국은 최근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해오고 있음. 지난해 9월 레 반 중 국방부 정치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군 고위정치간부 대표단이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제1부국장을 면담했었음. 북한측에선 지난달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대표단이 베트남에서 열린 양국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함.

● “北 권력승계, 올해 동북아 핵심이슈” <ICG> (4/29)

-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둔 민간 연구단체인 국제위기감시기구(ICG)는 올해 동북아시아의 3대 핵심 이슈로 북한의 식량난 등 인도주의적 문제와 권력승계 문제, 중국의 국제평화유지군 역할을 꼽았음. 이 기구는 지난달 완성, 발표한 ‘2009년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현재 안정적”이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해 “심각한 건강문제”를 겪은 점을 지적, “한국과 국제사회는 심각한 위기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한의 붕괴를 다룰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함.
- ICG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대해 “북한의 식량안보, 공중보건, 인권과 다른 인도주의적 문제들이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며 “탈북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갑자기 극적으로 늘어날 경우 지역에 커다란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함. 보고서는 중국의 국제평화유지군 역할과 관련,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중 평화유지군에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ICG는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중국의 이러한 입장 변화를 분석하고 중국의 이러한 역할이 갈등 해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해볼 것”이라고 말함.



● 美의원들 北 인권개선 촉구(4/28)

-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28일 낮 미국 의회 앞 광장에서 열림. 디펜스포럼 주최로 열린 이날 집회에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열악한 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한목소리로 북한에 촉구함. 특히 이날 집회에는 미 상·하원 의원 일부도 동참함.
- 샘 브라운백 (공화·캔자스) 상원의원은 연설을 통해 북한의 인권 참상을 강하게 비난하며 “북한 주민들을 도울 필요는 있지만 끔찍한 북한 정권을 도울 필요는 없다. 결코 그들 정권을 도와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그는 또 북한에 억류된 미국적 여기자 2명의 적극적 석방을 요구한 뒤 최근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미국 정부에 촉구함.
-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넨 (플로리다) 의원도 “북한은 정말 지구상에서 지옥”이라면서 “우리는 침묵하고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함. 그는 이어 “침묵을 지키는 것은 김정일의 독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라면서 “북한에서는 2천300만명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적극적 행동을 요구함.
- 에드 로이스 (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지금은 국제 사회가 함께 북한에 압력을 넣고, 인권을 위해 결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함. 로이스 의원은 또 “핵문제가 우선인 상황에서 왜 인권문제에 초점을 맞추느냐는 사람들도 있고, 일부 한국인들을 포함해 어떤 사람들은 우리들의 노력에 화를 내기도 한다”고 비난함.
- 이밖에 데이너 로라바커(공화·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한국전 당시 해병으로 참전했던 부친의 예를 들면서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함. 올해로 6번째를 맞는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한국에서 제성호 인권대사가 정부 대표로는 처음 참석했고, 탈북자 30여명과 일본인 납북 피해자가족 대표 등도 동참함.
- 행사를 주최한 디펜스포럼의 수전 솔티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촉구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평양에서도 언젠가는 이런 집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집회가 열린 의회 앞 잔디밭에는 ‘북한 주민들을 구출하자’, ‘중국이 탈북자들을 죽이고 있다’, ‘북한을 해방시키자’ 등의 내용이 적힌 구호판들이 등장했고, 탈북 여성들로 구성된 평양예술단의 공연도 열림. 행사장 주변에는 의사당 관광을 나온 미국인들도 집회 내용을 주시함. 딸과 함께 행사에 참석했다는 주부 리사 매들은 “옛날에 잡지에서 북한 관련 사안들을 본 뒤 북한 상황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면서 “북한 사람을 돕기 위해 오늘 행사에 참석했다”고 말함.
- 지난 26일부터 내달 2일까지 워싱턴에서 계속되는 북한자유주간 행사 기간에는 북한 정치수용소 참상을 담은 사진전과 토론회 개최, 다큐멘터리 상영 등 각종 행사가 이어지며, 다음 달 2일에는 주미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자 강제북송에 항의하는 시위도 예정돼 있음.



● 북한군 김정각, 베트남 방문(4/28)

- 북한의 김정각 인민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대장)을 단장으로 한 “인민군 정치일꾼 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하기 위해 28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통신은 그러나 대표단의 규모나 방문 목적, 일정 등은 전하지 않았음.
- 2007년 10월 제1부국장에 임명된 김정각은 고령에 질병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조명록(81) 총정치국장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됨.
- 1950년 1월 수교한 북한과 베트남은 1967년 무상군사지원 및 경제원조 협정을 체결했고 북한은 베트남전 때 공군 파견과 군수물자 지원 등으로 ‘혈맹’ 관계를 맺었으나 1979년 북한이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을 비난해 관계가 악화된 뒤 1992년 한국과 베트남의 수교 후 더욱 소원해짐. 그러나 양국은 2001년 7월과 2002년 5월 각각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천 득 령 베트남 주석의 상호방문을 통해 관계를 회복했으며 지난해 10월 농 득 마잉 베트남 서기장의 방북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공항에서 영접하기도 함.
- 양국은 최근 군사,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교류하고 있음. 지난해 9월 레 반 중 국방부 정치총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베트남 군 고위정치간부 대표단이 방북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 김정각 제1부국장을 면담했었음.
- 북한측에선 지난달 리명산 무역성 부상을 단장으로 한 경제대표단이 베트남에서 열린 양국간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제7차 회의에 참가했으며, 지난해 11월에는 문재철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위원장 대리를 단장으로 한 친선대표단이 베트남을 방문해 응웬 티 조안 부주석을 예방함.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李 외교차관보 방미..한미 현안 논의(4/29)

- 이용준 외교통상부 차관보가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 미국 정부 고위인사들과 한미관계 현안에 대해 포괄적인 정책 협의를 갖는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힘. 이 차관보는 방미기간 윌리엄 번즈 국무부 정무차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차관, 그리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련 인사들을 잇따라 면담할 예정임.
- 이 차관보는 이번 방문에서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가입 방침을 전달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의장성명 및



3개 북한 기업 제재대상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 북핵 6자회담 재개 방안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 특히 미국 정부가 최근 새로운 아프가니스탄정책을 발표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에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아프간 지원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됨.

● 한·미, 북한문제·‘개성역류’ 협의(4/29)

- 북핵문제와 평화체제문제를 총괄하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고위 간부가 최근 방미해 미국 측과 대북정책 전반에 대해 협의함. 한·미는 이 자리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자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미국 여기자와 현대아산 직원의 북한역류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됨.
-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9일 “허 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이 지난 26일 미국을 방문, 알렉산더 아비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등과 만나 북한문제에 대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한 뒤 30일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힘. 아비주 부차관보는 동아태 차관보의 인선이 늦어지면서 북한문제에 있어서는 차관보 대행역할을 하고 있음.
- 허 단장은 회의에서 최근 있었던 ‘개성접촉’ 결과를 설명하는 한편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의 역류문제에 대해서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북한이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를 잡아놓고 한 달이 지나도록 접견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인권탄압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이 문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기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이에 대한 미국측의 협조도 요청했을 것으로 보임.
- 한·미는 아울러 지난 2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6자회담 산하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실무회의에서 논의됐던 ‘동북아 평화·안보에 관한 기본원칙’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함. 허 단장의 이번 방미는 작년 9월 아비주 부차관보의 방한에 대한 답방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만 성 김 미 6자회담 수석대표와도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폐연료봉 재처리 착수, 6자회담 거부 등 북핵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6자회담 재개 방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허 단장이 북핵담당자가 아니어서 깊숙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나. 한·중 관계

● 韓-中, 군사적 연대 강화키로(4/29)

- 한국과 중국의 군 관계자들은 29일 양국의 군사적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함. 천빙더(陳炳德)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은 이날 베이징에서 이종구 성우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군사교류 확대가 양국 관계의 건강한 발전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 번영을 이끌어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천 총참모장은 한·중 외교관계가 진전되는 동안 양국의 군사 관계도 안정적인 형태로 발전해 왔다고 말함. 천 총참모장은 양국의 상호이해와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군사교류 및 훈련을 촉진함으로써 전략적·협력적 동반자 관계가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종구 성우회장은 최근 몇년간 한·중 관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고 군사 교류가 확대됐다고 말함. 이 회장은 또 한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하며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힘. 이 회장과 예비역 장성 8명은 한·중 예비역장성 간 친선교류 확대 방안과 지역안보정세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지난 27일 중국을 방문함.

● **中상하이서 윤봉길의사 의거 77주년 기념행사(4/29)**

- 일본의 상하이(上海) 점령 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해 일본의 수뇌부를 폭사시킨 매헌(梅軒) 윤봉길(尹奉吉·1908~1932) 의사의 의거 77주년 기념식이 29일 상하이에서 거행됨. ‘매헌 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와 상하이 홍커우구(虹口區) 주관으로 이날 오전 10시(현지시간) 상하이 루쉰(魯迅)공원(옛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달수 기념사업 부회장, 김정기 주상하이 총영사, 잉용밍(應勇明) 홍커우구 부구청장, 정한영 상하이 한인회장, 교민, 유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함.
- 기념식은 묵념, 기념사, 윤봉길 의사 노래, 헌화 등에 이어 매헌기념관 안의 기념물 교체 및 재개관을 기념하는 테이프 커팅식 등으로 진행됨. 김정기 총영사는 기념사에서 “윤봉길 의사 기념관을 매정에서 매헌으로 교체해준 상하이시 정부에 감사한다”고 밝히고 “기념관 이름의 변경은 1994년 기념관 설립 후 최대 성과이며 올해로 17년째를 맞는 한·중관계 발전의 결과”라고 말함.
- 윤 의사는 1932년 4월29일 일왕의 생일을 맞아 홍커우공원에서 열린 일본군의 상하이 점령 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 일본의 수뇌부를 폭사시킴으로써 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함. 의거 직후 현장에서 일경에 체포된 윤 의사는 상하이 일본 헌병대에서 가혹한 고문과 취조를 받았으며 그해 5월25일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월18일 일본 오사가 육군 위수(衛戍)형무소에 수감됨. 윤 의사는 그 해 12월19일 오전 7시40분 교외의 형 집행장에서 26발의 탄환을 맞고 순국함.

다. 한·일 관계

● **“김현희, 일본 방문 희망” <日언론>(4/30)**

-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범으로 사형판결을 받은 전 북한공작원 김현희씨가 지난 28일 서울 시내에서 일본 외무성 당국자 등과



극비 면담을 가졌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0일 보도했음. 이날 면담은 일본 정부측의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일본 경찰관계자도 입회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이뤄졌음.

- 김씨는 일본인 납치피해자들에 관해 자신이 북한에서 보고들은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에서는 또 김씨의 일본 방문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 지지(時事)통신도 김씨가 이날 면담에서 납치문제 진전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음.

라. 한·러 관계

● “北경유 리産가스 한국공급 가능성 여전”(4/29)

-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 가스프롬은 남북한의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경유해 한국에 러시아산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이 회사 대변인이 29일 밝힘. 세르게이 쿠프리아노프 대변인은 이날 모스크바 가스프롬 본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아직 이번 프로젝트를 지지할 수 없다는 북한측의 공식 입장은 듣지 못했다”고 말함.
- 이는 정치적 문제가 에너지 협력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러시아 정부 방침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가스프롬이 최근의 한반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업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됨. 쿠프리아노프 대변인은 특히 “이번 가스 프로젝트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현될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급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함.
- 그러면서 그는 “지난해 그루지야와 러시아가 전쟁에 돌입했을 때도 그루지야를 통하는 가스관으로 아르메니아에 가스 공급을 계속했고 지금도 러시아와 그루지야가 꺾끄러운 관계에 놓여 있지만 그루지야를 통해 남오세티야로 가스를 공급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가스가 ‘평화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양국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이르면 2015년부터 연간 최소 750만t의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으로 도입키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이를 위해 한국가스공사와 가스프롬이 북한 경유 가스배관 구축을 위한 공동연구를 추진키로 함.
- 현재 양측은 내년 최종 계약을 목표로 실무 접촉을 통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러시아 측은 관리와 비용의 이점을 고려, 북한 육상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 건설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삼척까지 해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북한인 것으로 전해짐.
- 쿠프리아노프 대변인은 또 “한국 기업들이 사할린 가스관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가스 사업에 협력할 준비도 돼 있다”고 강조함. 그는 이어 “사할린



-3 프로젝트에 관해선 일단 가즈프롬이 그 지역에 라이선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할린-3 프로젝트에 한국기업 참여 가능성에 대해 말하기는 아직 이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최대한 넓게 협력할 생각”이라고 덧붙였음.

● 러'극동관구 대표 방한 취소(4/27)

- 올레그 사포노프 러시아 극동관구 대통령 전권대표의 방한이 취소됨.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7일 “오늘 방한할 예정이던 사포노프 대표의 방한이 러시아측 사정으로 취소됐다”고 밝힘.
- 사할린 등 러시아 극동지역 10개 주를 포괄하는 극동관구를 관할하는 사포노프 대표는 부총리급으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초청으로 당초 27~29일 방한할 예정이었음. 사포노프 대표는 방한기간 유 장관과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정중환 국토해양부 장관 등과 만나고 이명박 대통령도 예방할 계획이었음.
- 다른 당국자는 “러시아측이 사포노프 대표가 갑자기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의 일정이 생겨 방한할 수 없다고 지난 25일 알려왔다”면서 “방한이 취소된 것은 아니며 조만간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함. 하지만 상대국 정상과의 약속까지 잡혀있는 상황에서 자국 사정으로 불과 방한 이틀 전에 돌연 취소를 통보한 것은 외교적 결례라는 지적도 없지 않음.

마. 미·중 관계

● 中, 美서 106억弗어치 상품·기술 구매(4/29)

- 중국이 28일 미국 기업들과 106억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무역·투자 계약을 체결, ‘큰 손’임을 과시함.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이 이끄는 중국 기업의 구매사절단은 이날 시카고에서 끝난 중-미 무역투자협력포럼에서 미국 기업들과 32개 무역 및 투자협정을 맺고 청정에너지 기술, 통신설비, 전자설비 등을 구매키로 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구매협정에는 차이나모바일(中國移通)·레노보(聯想) 등 50여개 중국 업체들과 애플·시스코·델컴퓨터·포드자동차·HP 등 미국 업체들이 참여함. 천더밍 부장은 “우리는 중국기업들이 미국에서 구매를 늘리도록 계속 장려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또 미국 기업들과 무역 관련 단체들이 중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음.
- 천 부장은 이어 중-미 양국이 경협을 강화하고 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희망을 피력함. 구매사절단의 대변인은 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미국산 첨단 제품을 수입하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는 길이 열려 기술력이 향상되며 중국 제품의 질을 높이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함.



- 이에 대해 미국 일리노이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중-미 구매 협정은 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기 노력하고 있는 적합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중-미간 상업적 유대강화는 세계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중국 구매사절단의 방미는 올 여름 미국에서 열리는 기존의 전략경제대화(SED)와 전략대화를 통합한 ‘전략과 경제대화’에 앞서 이뤄진 것으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에 쐐기를 박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풀이됨.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은 전략경제대화가 열리기 전 구매사절단을 미국에 파견, 162억달러(2006년), 326억달러(2007년), 136억달러(2008년)어치의 미국 제품을 각각 구매해 중-미간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제스처를 취해옴.

바. 미·일 관계

● 미·일 국방 “미사일방위 협력 강화”(5/2)

-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들은 1일 회담을 갖고 북한의 최근 로켓 발사와 관련해 두 나라의 미사일방위분야 협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했음.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은 이날 워싱턴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 후 이같이 밝혔음.
- 게이츠 장관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 전후 미국과 일본 간 밀접한 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발사 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강경한 내용의 의장성명도 양국 간 협력의 결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 한 일본 관리는 하마다 방위상과 게이츠 장관이 자국의 방위전략을 재검토해 국방분야 협력을 증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음. 하마다 방위상은 이날 미 국방부로 게이츠 장관을 방문, 처음으로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교환했음.

● 日, 美고속철 사업에 ‘신칸센’ 로비(4/30)

- 일본 정부는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정권이 발표한 130억달러 규모의 고속철도 사업 계획에 신칸센 열차가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에 나설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0일 보도함. 이를 위해 다음달 초순 가노 도키오(加納時男) 국토교통성 부대신이 미국을 방문, 레이 라후드 교통장관과 면담을 갖고 신칸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소개하며 채택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짐. 오바마 정부는 대선 공약인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로스앤젤레스-샌프란시스코, 뉴욕-워싱턴 등의 구간에 고속철도를 정비하는 계획을 공표했었음. 이에 따라 일본 이외에도 독일과 프랑스도 자국 고속철도의 채택을 위한 로비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주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 일본 정부는 지난 2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신칸센 기술의 우수성을 자랑한 데 이어 이번에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파견, 1964년 개통 이후 단 한번의 사망사고도 내지 않은 신칸센의 안전성을 어필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함.

사. 미·러 관계

● “오바마 100일 외교 유연성 보여줘”(4/28)

- 미하일 마르겔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위원장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이 외교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여줬다고 28일 밝힘. 마르겔로프 위원장은 이날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100일 동안 대립보다는 대화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오바마 행정부는 그루지야와 우크라이나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이나 동유럽 미사일방어(MD) 계획에 대해 절대로 서두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미국과 러시아 관계에서 문제를 대화로 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함.

● 미·러 내달 모스크바서 군축협상 개시(4/28)

- 미국과 러시아는 5월18일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오는 12월 시한이 만료되는 전략무기 감축협정(START-1)의 후속협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1차 협상을 갖는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27일 발표함. 미·러 양국은 지난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로즈 고테필러 미국 국무부 겸증·군축 차관보와 아나톨리 안토노프 러시아 외무부 안보군축 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가진 예비회담에서 1차 협상 일자를 이같이 정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성명을 통해 밝혔음.
- 군축협상에 앞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오는 7일 워싱턴에서 회담을 갖고 START문제를 협의할 예정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1일 런던에서 만나 START 후속협정을 도출하기 위한 회담을 갖기로 합의함.

아. 중·일 관계

● 中·日총리, SI.경제위기 공동대처 다짐(4/30)

- 중국과 일본은 29일 베이징에서 양국 총리회담을 갖고 전 세계 경제위기와 돼지인플루엔자(SI), 환경문제 등 국제 문제에 대해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대처기로 다짐함. 관영 신화통신은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이날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금융위기 상황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다짐했다고 30일 보도함.



- 원 총리는 “세계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는 큰 도움이 된다”면서 “무역과 상호투자 안정, 에너지·환경, IT·통신분야, 녹색성장, 첨단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함. 원 총리는 “한·중·일 3국간 협력을 충실히 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과 아시아 채권시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해나가야 한다”면서 “아시아 국가가 앞장서 보호무역주의 배격, 국제금융관리 강화,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함.
- 그는 “SI가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했고 국제사회와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을 강화해 인민의 건강과 생명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면서 전염병 예방을 위한 양국간 협력을 강조함. 아소 총리는 “일본도 중국과 호혜 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환경보호, 기후변화 등 국제문제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를 희망한다” “중국과 공동으로 SI의 확산을 방지하자”고 말함.
- 아소 총리는 일본 업체가 중국의 제3세대 이동전화(G3) 시장에 진출해 기술 협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함. 이번 회담에서는 두 총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갈등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음. 일본 정부의 한 관리는 “두 총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로 인한) 갈등에 과잉 반응해서는 안 되며 궁극적으로 6자회담의 틀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함.
- 회담에서는 아소 총리가 야스쿠니(靖國)신사에 공물을 공납한 것과 관련,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짐. 원 총리는 “역사 문제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문제”라면서 일본은 약속을 준수하고 문제를 적절하고 신중하게 처리해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촉구함. 그는 “양국 정부 특히 정치인들은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을 중시해야 한다”면서 “양국 간의 4개 합의사항의 정신에 따라 신중하고 적절하게 문제를 처리하고 양국 관계 발전이란 큰 틀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의 진전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함. 아소 총리는 이와 관련, “일본 정부의 입장은 1995년과 2005년 일본 총리가 발표한 담화 내용에 담겨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양국 간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해 정치적 신뢰관계를 강화해 나가자”고 말함.
- 아소 총리는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를 적절히 해결해 나가자고 제안했고 원 총리는 중국의 입장과 주장을 전달함. 두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오는 10월부터 베이징 서우두(首都)공항과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을 잇는 정기항 공편을 운행하기로 합의했고 또 베이징, 상하이(上海), 광저우(廣州)의 시민이 오는 6월부터 일본에 개인관광을 하는 것을 허용키로 합의함.



● 日 아소 총리, 오늘 중국 방문(4/29)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29일 오전 하네다(羽田)공항을 통해 전용기편으로 중국 방문길에 오름. 아소 총리는 이날 오후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에 이어 30일 오후에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와 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 환경 및 경제 분야의 협력 방안 등을 협의함.
- 아소 총리의 이번 방문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참석차 중국을 찾았던 지난해 10월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5월 양국 정상 간 합의한 상호 방문의 일환임. 일련의 회담에서 아소 총리는 양국간 전략적 호혜관계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에너지 절약기술 및 지구온난화 대책 등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이끌어낸다는 계획임. 특히 아소 총리는 일련의 회담에서 중국과 일본의 환경 및 에너지 부문 협력을 담은 ‘중-일 환경·에너지절약 종합 협력 플랜’ 마련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중국의 석탄, 화력발전소 설비 개량 등 환경 관련사업 지원 및 관련기술자 육성, 황사 및 산성비 문제 등 환경오염 방지 지원자금으로 올 예산에 총 50억엔의 자금을 확보함.
- 아소 총리는 또 중국 정부가 디지털 가전 등의 제조업자가 제품과 관련한 핵심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다음달 강행하려는데 대해서도 재고를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짐. 이 제도는 중국에서 생산·판매되는 외국계 정보기술(IT) 제품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술인 ‘소스코드’ 공개를 제조업체측에 강제하는 것으로,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제품의 현지 생산·판매와 중국으로의 수출이 불가능하게 됨.
- 이와 함께 그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제3세대 이동전화(G3) 등 차세대 휴대전화 개발 및 보급에 일본이 기술을 협력해 주는 방안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짐. 이밖에도 아소 총리는 멕시코를 시작으로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돼지 인플루엔자 감염 확대 방지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아소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중국 경제계 인사들에게 강연도 할 계획이며 일본측이 자금을 제공해 건설한 제철 공장 등도 방문한 뒤 30일 오후 귀국할 예정임.

자. 중·러 관계

● 中·러 군사협력 강화.. 밀월시대 여나(4/29)

- 중국과 러시아가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러시아를 방문한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이 올해 25차례의 합동훈련을 할 것이라고 28일 밝혔다고 영국 타임스 인터넷판이 29일 보도함.
- 세르듀코프 장관은 양국간 합동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



하지 않았으나 러시아는 러시아군의 수준과 중국과의 군사기술협력에 만족한다고 말함. 량 부장은 러시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국방장관 회담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함.

- 중국과 러시아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과 함께 SCO 창설멤버. SCO는 단순한 지역 협력기구 수준을 넘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맞서는 군사동맹체로 부상하고 있음. 핵 문제로 미국 등 서방과 대립하고 있는 이란도 SCO에 옵서버로 참여하고 있음.
- 냉전시절 공산권 양대 세력이었던 중국과 러시아는 국경분쟁을 해결한 뒤 2005년 첫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협력을 강화해옴.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18일 타지키스탄에서 SCO 병력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합동군사훈련에 나란히 참여했으며, 러시아는 중국해군 창설 60주년 기념 해상열병식에 군함을 파견함.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7일 양제츠(楊潔지<兼대신虎들어간簾>) 중국 외교부장과 만난 자리에서 냉전시절 라이벌이었던 중국과 러시아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로 규정했으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도 양국이 공통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함. 중국과 러시아가 이 처럼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에서 미국과 유럽 세력을 견제하려는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 특히 러시아는 ‘자원의 보고’ 중앙아시아에 대해 그동안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 키르기스스탄은 앞서 지난 2월 러시아의 압력에 굴복, 자국 내 미군기지 폐쇄를 결정함.

차. 기타

● 베트남서 2차 ASEM 교육장관회의 개최(4/30)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제2차 교육장관회의가 다음달 13일부터 15일까지 베트남 수도 하노이에서 한국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45개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고 베트남 교육훈련부가 30일 밝힘. “경험 공유와 고등교육의 최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에서는 ASEM 회원국의 미래 수요를 위한 지속적인 인적자원 개발 등에 대한 전체 토의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며, 상호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모색하게 된다고 교육훈련부는 설명함.
- 또 본회의(14~15일)에 앞서 열리는 고위관리회의(SOM)와 전문가회의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교육훈련부는 덧붙였음. 안병만 장관은 13일 오후 하노이에 도착하며 16일 오전에는 하노이 한인학교 신축 기공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 “한·아세안관계 질적발전 도모해야”(4/30)

- 올해로 대화관계 수립 20주년을 맞는 한국과 아세안(ASEAN)이 이제는 질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재현 외교안보연구원(외안연) 객원교수는 30일 서울 서초동 외안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관계 현황과 전망’ 워크숍에 앞서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에서 “아세안 국가와 정상 간의 교류가 활발한 올해는 한·아세안 관계의 질적 발전을 모색하고 건설적 미래 구상과 제안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주장함.
- 이 교수는 특히 오는 6월 1~2일 제주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함. 그는 한·아세안관계 발전을 위해 우선 지난 3월 출범한 한·아세안센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등 사회·문화 부문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힘. 이 교수는 또 정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아세안 국가들을 감안해 역내 무역자유화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경제위기를 한·아세안관계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함.
- 아울러 전통적인 사회·문화·경제 이슈뿐만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대테러, 해상안전,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해서도 한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함. 이 교수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2004년 발표했던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서 협력 수위를 높인 공동선언 채택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함.
- 권 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 아세안 협력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유망지원 사업의 패키지화와 국별 차별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힘. 권 위원은 특히 “아세안측 지원요청에 따라 방만하게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협력사업을 정리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효과적인 사업추진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함. 그는 또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역내 빈곤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화해 아세안 국가에 대한 리더십과 파트너십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홍석준 목포대 교수는 “한국의 일방통행식 원조나 기부의 메커니즘이 아닌 쌍방향의 소통체계를 확립하고 가치체계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한·아세안관계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말함. 그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두 지역의 사회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한·아세안관계의 정체성을 정립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실천강령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함.



● 中 “WHO 총회에 대만 참가 초청”(4/29)

- 세계보건기구(WHO)가 다음 달 18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총회(WHA)에 대만 보건 당국자들의 참가를 초청했다고 중국 정부가 공식 확인함. 마오췌안(毛群安) 중국 위생부 대변인은 29일 마저릿 찬(陳馮富珍) WHO 사무총장이 대만 보건 당국자들에 대해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읍서버로 참석해 달라며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밝힘.
- 마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대만 동포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우리의 선의를 보여주는 것이며 양안관계의 평화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중국의 성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함. 중국은 지난 1971년 대만이 유엔에서 축출된 이후 WHO의 각종 활동으로부터 대만을 배제해 왔으나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 취임 이후 양안관계 발전을 위해 대만의 WHA 읍서버 참석을 허용함.
- 마 대변인은 “중국과 대만은 최근 대만이 WHA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와 협상을 가졌다”면서 “중국은 언제나 대만 동포들의 복지를 우려하고 있으며 WHO에 참여하겠다는 염원도 잘 알고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중국은 대만의 의료 전문가들이 국제 보건기구에 참여해 WHO로부터 보건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습득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다. WHA는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임.

● “中경제 ‘W’형 회복전망” <中발전연구센터>(4/29)

- 중국 경제가 두차례에 걸쳐 바닥을 다진 후 상승하는 ‘W’자형 회복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위빈(余彬)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거시경제연구부장은 한 토론회에서 “1분기가 중국 경제의 바닥이지만 중국 경제가 회복되려면 3~5년이 걸릴 것”이라며 이렇게 밝힘.
- 위 부장은 중국 경제가 이미 2007년 3분기 이후 조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국제금융위기의 충격으로 하락폭이 심화하고 조정기간이 길어졌다고 분석하고 작년에는 경기하강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지적함.
-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0.6%에서 2분기 10.1%, 3분기 9%, 4분기 6.8%로 뚜렷한 하락세를 나타냈으며 올해 1분기에는 6.1%로 하락추세를 지속하고 있음. 위 부장은 중국 경제둔화의 원인으로 ▲중국 경제의 순환기적인 조정과 국제금융위기의 발생 ▲금융위기 직전 중국의 지속적인 경기과열 억제 정책의 뒤늦은 효과 ▲원가상승과 발전방식의 변화 등을 꼽았음.
- 그러나 중국 경제는 3월 들어 가시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그는 평가함. 기업생산이 작년 동월 대비 8.3% 증가해 지난 1~2월보다 4.5%포인트 높아졌으며 1분기 투자와 소비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제조업구매자지수(PMI)가 3월 52.4를 기록, 4개월 연속 상승하며 기준치 50을 넘어섬.
- 위 부장은 중국 경제의 회복세가 계속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



의적인 반응을 보임. 올해 1분기 중국의 소비와 투자가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부의 소비활성화 대책과 신규대출 확대, 가전하향(家電下鄉·농촌 가전제품 구입 지원제도) 등의 정책효과가 상당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며 민간주도의 소비여력은 부족하다고 분석함.

- 신규대출은 올해 들어 3월까지 너무 빠르게 증가해 지속성을 갖기 힘들고 신규대출의 축소는 바로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또 미국, 유럽의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돼 상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세계경제가 다시 흔들리는 악순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위 부장은 지적함.
- 그는 올해 2~3분기 중국 경제성장 폭이 비교적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조정국면과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올해 4분기와 내년 1분기 다시 하락하며 'W'자형 추세를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함.

● 中, 건국 60주년 맞아 애국주의 캠페인 시작(4/27)

- 중국은 27일 올해 건국 60주년을 맞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을 지속하기 위한 사상운동의 일환으로 애국주의 교육 캠페인에 나섬.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당의 '균중성 애국주의 교육' 방침을 1면 머리기사로 올려 애국주의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음.
- 당 판공청이 중앙 선전부의 '의견' 형식으로 발표한 이 캠페인은 중국이 공산당의 주도로 개혁개방을 단행한 이후 정치적 안정을 기하고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부상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위대한 조국 건설을 위해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촉구함. 중국에선 공산당의 이같은 방침 아래 애국주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TV 대담과 특별기획, 연속극 그리고 음악회를 비롯한 대규모 공연, 강연회, 세미나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앞서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선전부장은 지난 14일 전국 당 지부 선전부 관계자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오는 10월1일 국경절 경축을 위한 주요 사상·선전활동으로 '균중성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할 것을 지시, 애국주의 캠페인의 시작을 예고함. 중국이 건국 60주년을 맞아 애국주의 교육 강화에 나선 것은 정신무장으로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커진 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시도로 풀이되고 있음.
- 중국은 지난 1950년 후반의 대약진운동이나 1960년대 문화대혁명 때도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을 위해 애국주의 열기를 고취시켰었음. 중국은 작년 베이징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개혁개방 30주년의 눈부신 성과에 고무돼 중화부흥의 기치를 높이 들었으나 황금만능과 개인주의, 그리고 이기주의가 팽배해 사회주의의 장기적인 발전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 속에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닥치자 체제 수호의 필요성을 절감한 것으로 보임.

● <베트남 공산당, 광산개발사업 절충안>(4/27)

- 베트남의 최고 권력집단인 공산당 정치국이 중국의 주도로 개발 중인 베트남 내 보크사이트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해 사실상의 절충안을 내놓았음. 27일 베트남 국영통신(VNA)에 따르면 공산당 정치국은 보크사이트 광산이 위치한 타이 응웬(중부 고원지대)성이 국가안보와 방위에 민감한 지역인데다 장기적으로는 자연환경과 문화적 동질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곳이라는 결론을 내려짐.
- 이에 따라 보크사이트 산업은 국가안보와 방위를 유지하면서도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보호에도 주력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국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VNA는 전함. 베트남의 최고 권력집단인 정치국의 이런 입장 정리는 보크사이트 광산의 채광권을 중국알루미늄공사(차이날코) 계열사에 허용한 것과 도로, 항만 등 베트남 내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에 중국의 싹쓸이식 진출이 두드러진 데 따른 혐중(嫌中) 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됨.
- 정치국은 지난 24일 발표문을 통해 정치국이 이 문제와 관련해 현직에서 물러난 당과 국가 최고지도자들은 물론이고 과학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타당성을 검토했다면서 국내의 풍부한 보크사이트 자원을 내수와 수출용으로 개발하기로 한 지난 9~10차 공산당 전당대회의 결정을 올바른 것이라고 밝힘.
- 정치국은 보크사이트 채광과 생산시설에는 최첨단 기술이 사용되어야 하며 양질의 알루미늄 생산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전력을 추가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력발전소 건설이 중요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VNA는 보도함. 정치국은 또 정부가 이 광산 개발 사업을 검토한 뒤 이 사업이 타이 응웬지역의 사회-경제적 요구에 합당하게끔 조정해야 한다며 이 사업에 투입되는 근로자 대부분은 베트남인들이 돼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외국인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
- 정치국은 이어 각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조기에 완료해 타이 응웬 지역의 개발계획에 포함되도록 지시함. 특히 보크사이트 채광이 끝난 뒤 즉각 복토(覆土) 및 식수(植樹)작업을 실시할 것도 지시함. 동시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소수민족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며 지역 주민들을 우선적으로 근로자로 채용해야 한다고 권고함.
- 그동안 문제가 돼온 외국(중국)근로자들의 체류와 투입은 적법한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정치국은 밝힘. 정치국은 이와 함께 관련부처에 보크사이트 탐사, 채광 및 가공 등 일련의 작업을 위한 구역 조정(zoning)을 면밀히 검토할 것도 아울러 지시함.
- 한편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최근호(4월 16일자)에서 베트남에



대한 중국의 파상공세 식 진출에 대한 반감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차이날코 사에 대한 보크사이트 채광권 허용을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았음. 알루미늄의 주원료인 보크사이트의 경우 베트남이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1 가량인 80억t을 갖고 있으며, 중국은 건설업 부양을 위해 베트남의 보크사이트광산 확보가 절실한 실정임.

- 그러나 베트남의 전문가들은 보크사이트 채광 과정에서 토양과 식수 오염 같은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다 중국이 똑같은 이유로 자국 내에서의 보크사이트 채광을 금지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옮겨와 채광을 하는 것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임.
- 이와 관련해 베트남의 전쟁영웅인 보 응웬 지압 장군은 응웬 쩐 중 총리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전략요충지인 타이 응웬에 많은 중국인들이 상주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함. 그러나 중 총리는 이 채광 사업이 “당과 정부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라는 종래의 입장을 고수해옴. 익명을 요구한 현지 외교 소식통은 “이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데 정치국이 고심 끝에 일종의 절충안을 낸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또 어떤 반응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함.

● 中, 국제금융시스템 개혁 촉구(4/27)

- 중국은 26일 미국 달러화가 지배하고 있는 국제금융질서를 개혁하고 국제금융계에서 개발도상국의 발언권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힘. 리용(李勇)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개막한 IMF(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것은 현 국제금융위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따라서 국제금융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함.
- 리용 부부장은 달러를 직접 지칭하지는 않았으나 각국이 현 기축통화를 보유하는 데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기축통화와 다른 화폐간의 환율을 안정시키며 국제통화시스템을 다양화하고 건전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앞서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은 지난 3월23일 달러화를 대체해 IMF의 특별인출권(SDR)을 전 세계 공용의 ‘슈퍼 통화’로 사용하자고 제의했었음.
- 리용 부부장은 IMF와 세계은행에서 자국을 비롯한 개도국의 발언권과 투표권을 선진국과 평형을 이루도록 높여야 한다고 말함. 그는 세계은행 총재 등 간부 선출에서 출마에 대한 개방성을 확대하고 경쟁성과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는 국제금융기구의 지분을 개혁하는 모든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 한편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중국을 비롯한 브릭스 국가들이 세계은행과 IMF에서 공정하고 완전한 대표권을 인정받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함.



● 왕치산 中부총리 “세계경제 바닥 아니다”(4/27)

- 왕치산(王岐山) 중국 부총리가 26일 “세계경제가 바닥에 도달했다고 볼만한 징후는 없다”면서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중국경제 조기 회복론에 제동을 걸었음. 왕 부총리는 이날 안후이(安徽)성 성도인 허페이(合肥)에서 열린 제4회 중국중부투자무역박람회 개막식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문화보(文匯報) 등 홍콩언론들이 27일 보도함.
- 왕 부총리는 “세계 경제는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따라서 중국은 안정적이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함. 왕 부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중국 안팎에서 중국경제가 조기에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정부가 경기부양책의 강도를 다소 완화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중국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금년도에 총 4조위안을 투입하는 경기부양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같은 경기부양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은 지난 1.4분기 6.1% 성장률을 기록함.

● 中, 베트남의 러' 잠수함 구매보도에 긴장(4/29)

- 중국은 베트남이 조만간 러시아로부터 최신 잠수함 6척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도되자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국 관영매체들은 29일 러시아 신문을 인용, 러시아가 ‘대양의 블랙홀’로 불리는 킬로급 636형 잠수함 6척을 베트남에 판매하는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함.
- 러시아는 18억달러 규모의 이 계약이 체결되면 앞으로 1년 내에 베트남에 6척을 모두 인도할 계획이어서 베트남의 해군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 매체들은 베트남 해군이 보유하게 될 킬로급 잠수함의 제원을 자세히 소개하고 베트남의 해상 작전 능력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곁들이면서 이번 베트남·러시아 구매 계약에 크게 주목, 베이징 당국의 불편한 심기를 시사함.
- 해군력이 약한 베트남이 러시아 잠수함 구매에 나선 것은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의 파라셀(西沙)군도를 둘러싼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베트남은 또 최근 연안에서 대규모 해저 가스전이 발견됨에 따라 해상 방어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베트남은 앞서 지난 25일 파라셀 군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이 섬을 관장하는 행정기관장을 임명했다. 베트남과 중국 및 대만이 영유권을 주장해온 파라셀 군도는 지난 1974년 중국군이 당시 이 섬에 주둔하던 남베트남군 해병대 파견대 병력을 무력화시킨 이후 지금까지 중국 관리 아래에 있음.



● ASEM 외무장관회담 5월말 베트남 개최(4/29)

-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소속 45개국 외무장관 회담이 다음달 베트남서 열림. 베트남 공산당 기관지인 라오동(노동)은 29일 팜 자 끼엠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의 말을 빌려 다음달 25~26일 수도 하노이에서 제9차 ASEM 외무장관 회담이 개최된다고 보도함.
- 이번 회담에서는 회원국들 사이의 협력 증진과 글로벌 경제위기 대처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끼엠 장관은 밝힘. 그는 “베트남으로서는 개방주의와 역동적인 국제통합을 추구해온 일관적인 대외정책은 물론이고 다른 회원국들과 공조를 계속하려는 염원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 한편 이번 회담은 회원국 수가 37개국에서 45개국으로 늘어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음. 제8차 회담은 지난 2007년 독일에서 열렸음.

● 日, 한·중·일 정상회담 8월말 희망(4/28)

- 일본 정부는 올해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국, 중국, 일본 3국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 8월 하순을 희망하고 있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8일 보도함. 일본 정부는 중국 정부가 6월 하순과 8월 하순의 2개안을 갖고 한국과 일본 정부에 타진해온데 대해 이같이 회답했으나 한국과의 조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함.
- 중국 정부는 오는 10월 건국 60주년을 기념하는 군사퍼레이드를 예정하고 있는 등 가을 이후 원자바오 총리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해 여름까지 개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회담 장소는 원 총리의 출신지인 텐진(天津)이 유력함.
- 일본 정부가 8월 하순 안을 택한 것에 대해서는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 실시 시기를 감안한 아소 다로(麻生太郎) 총리의 판단일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음. 오는 9월 임기 만료를 앞둔 중의원의 해산 시기에 대해서는 ‘5월 해산-6월 투표’, ‘7월 해산-8월 투표’ 등이 예상되고 있음.
- 한·중·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12월 일본 후쿠오카(福岡)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바 있음. 이번에는 중국이 주최할 차례임.